

발 간 등 록 번 호

32-9740029-001292-01

정책연구용역 2019-1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발전방안 연구(제1권)

연구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법원행정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발전방안 연구 (제1권)

연 구 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책임자 :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장광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종현 (한양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제 출 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발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유 찬

목 차

I. 서 론	1
II. 사법서비스진흥기금 현황 및 특성	3
1. 설치근거 및 조성 현황	3
2. 기금수입 및 지출현황	6
가. 수입개요	6
나. 지출현황	8
3. 주요사업 분야	10
가. 공탁전산시스템 운용	10
나. 소송구조지원	11
다. 조정제도지원	12
라.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14
마. 사법서비스 향상	15
III.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주요사업 영역별 쟁점	22
1. 개요	22
2.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	23
3. 소송구조지원	24
4. 조정제도지원	28
5.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31
6. 사법서비스 향상	35
IV. 해외사례	60
1. 주요국의 조정제도	60
가. 미국	60
나. 독일	64
다. 프랑스	65

라. 일본	67
2. 해외 사법서비스 사례	69
가. 일본의 사법지원센터: 호테라스(法-テラス)	69
나. 미국의 사법형그룹홈: 오하이오 주 중간처우의 집	75
다. 캐나다의 라키비움: 국립도서관기록관(Library and Archives; LAC)	78
라. 미국의 전자소송제도	80
V. 종합	83
1. 기금운용개선	83
가. 기금사업 과목구조 개편방향	83
나. 중복사업에 대한 개선방향	88
2. 사업 활성화	89
참고문헌	92

표 목차

<표 I-1> 주요 연구내용	2
<표 II-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연혁	3
<표 II-2>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조성: 「공탁법」 제19조, 제29조	4
<표 II-3>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 「공탁법」 제31조	5
<표 II-4> 기금운용기구 조직도	5
<표 II-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규모(2016~2019)	6
<표 II-6>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계획 총괄표	7
<표 II-7>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	7
<표 II-8>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 계획 총괄표	8
<표 II-9>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와 비중	9
<표 II-10> 공탁전산시스템 운용 사업 근거	10
<표 II-11> 소송구조지원 사업 근거	11
<표 II-12> 조정제도지원 사업 근거	12
<표 II-13> 법률구조단체 지원 사업 근거	14
<표 II-14>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근거	16
<표 II-15>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근거	18
<표 II-16>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 및 대국민 소통 지원 사업 근거	19
<표 III-1>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주요사업 분야와 활동	22
<표 III-2> 소송구조신청 처리결과 현황	26
<표 III-3>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소송구조 인용사건 규모변화	27
<표 III-4> 연도별 개인파산·개인회생·면책 사건의 접수건수, 처리건수 및 인용률	27
<표 III-5> 조정위원 분류	29
<표 III-6> 조정위원 수당 지급기준(2015~2019)	30
<표 III-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건수 및 예산소진 시기	34

<표 III-8> 최근 5년간 연령별 보호처분건수	36
<표 III-9> 치매환자 수 및 유병률 전망	39
<표 III-10> 담당 법원별 보호소년 수탁기관 수, 위탁보호위원 규모	40
<표 III-11>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42
<표 III-12> 연도별 등록외국인 비중 변화	43
<표 III-13> 등록외국인 상위 10개국의 연도별 변화	43
<표 III-14> 연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45
<표 III-15> 전자소송 시행 경과	46
<표 III-16> 연도별 전자소송 접수건수	46
<표 III-17> 연도별 전자소송 비율(본안사건 제1심 기준)	47
<표 III-18> 연도별·전자소송 유형별 스캔물량 추이	47
<표 III-19> 연도별·전자소송 스캔물량 증가율	48
<표 IV-1> 2005~2013년 멀티옵션 프로그램 시행 실적과 조정 절차 시행 실적	62
<표 IV-2> 2000~2001년 일반민사사건 조정 회부, 조정 성립 현황	64
<표 IV-3> CMAP 조정 관련 비용	67
<표 IV-4> 일본 민사조정 신청 수수료	69
<표 IV-5> 사법지원센터 설치 근거: 「총합법률지원법(總合法律支援法)」 제2조	70
<표 IV-6> 일본 사법지원센터 조직도	71
<표 IV-7> 사법지원센터 업무: 「총합법률지원법(總合法律支援法)」 제3조~제7조	72
<표 IV-8> 오하이오 주 지역사회기반 치료센터(CBTC)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예시 ..	77
<표 V-1> 「공탁법」 제31조	84
<표 V-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84
<표 V-3>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 지출 계획	85
<표 V-4> ‘사법서비스 향상’ 세부 사업 내 사업 리스트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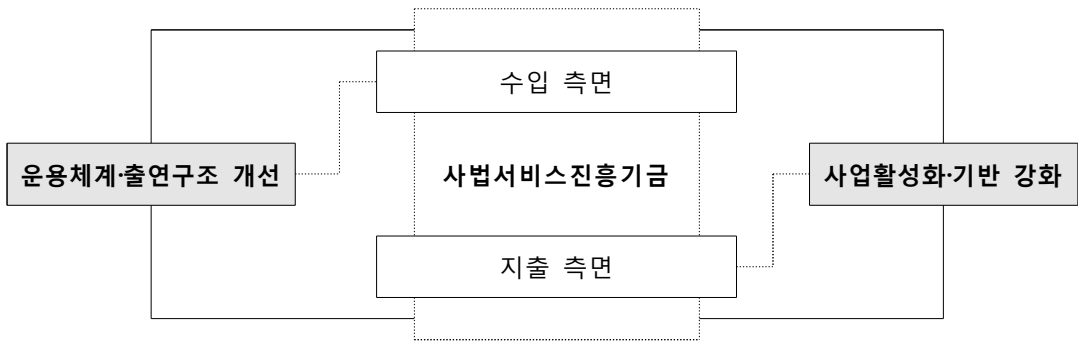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III-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5
[그림 III-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차상위계층 규모	25
[그림 III-3] 조정 유형별 성공률	28
[그림 III-4] 다문화혼인건수 및 혼인비중	32
[그림 III-5] 다문화이혼건수 및 이혼비중	32
[그림 III-6] 총체류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 및 비중	33
[그림 III-7] 연도별 제1심 재판상 이혼사건의 추이(접수 기준)	34
[그림 III-8] 2017년 보호처분 건수 연령별 비중	37
[그림 III-9] 노령화 지수(추정 포함)	38
[그림 III-10] 고령인구비율(추정 포함)	38
[그림 III-11] 한·중·일·미 4개국 고교 이미지 비교	50
[그림 III-12] 사익을 위해 법규를 위반할 국민의 비율 비교	51
[그림 III-13] 교육단계별 학생의 준법정신에 대한 인식	52
[그림 III-14] 국립중앙도서관 상영, 전시 일정(2019년 7월)	56
[그림 III-15] 국립중앙도서관 행사 일정(2019년 7월)	57

I. 서론

- 정부는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신설·운용할 것을 발표하였으며(2015.12.28.), 이에 따라 2016년 기존 세입세출외의 형태(공탁출연금)를 기금으로 전환하여 재정으로 편입하여 신설·운용
- 대국민 사법서비스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성이 있을 때에 사법 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 및 피해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따라서 사법서비스의 범위는 일반적 소송구조, 국선변호인제도를 넘어 국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광범위한 활동을 의미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사업범위는 구체적으로 「공탁법」 제31조를 통해 제시되고 있음
 - 협의의 대국민 사법서비스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성이 있을 때에 사법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 및 피해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공탁법」과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법행정 및 사법절차상 지원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 공탁제도 개선 및 전산시스템 개발과 운용, 소송구조, 조정제도,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 개선 등을 주요사업 영역으로 포괄적 제시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목적은 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확대, ②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두고 있었으며, 신설 이후 4년차에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성과와 쟁점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세입세출외로 운영되었던 공탁출연금이 재정으로 편입됨으로써, 구조적으로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기금으로 전환된 이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관리 방식, 사업수행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표 I-1〉 주요 연구내용



- 사법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의 비전을 모색하고, 재정투입의 의미와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차별화 및 활성화 방향 제시

II. 사법서비스진흥기금 현황 및 특성

1. 설치근거 및 조성 현황

□ (연혁) 2016년 1월 1일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설 및 운용 개시

〈표 II-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연혁

시기	내용
2007.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탁법 전부개정 · 공탁금 운용수익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출연받아 법률구조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008.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탁금관리위원회 법인설립 등기
2015.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탁법 일부개정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신설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공탁금관리 위원회는 보관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기금에 재출연하는 역할로 권한 축소
20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설 및 운용 개시

출처: 대법원(2019), 『2019년 기금존치보고서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p. 6.

□ (설치근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공탁법」 제28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음

-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¹⁾

□ (기금의 조성) 기금은 「공탁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과 「공탁법」 제29조 제1항의 각 호에 근거한 재원에 의해 조성됨

- 대법원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기금의 대부분은 공탁금 운용수익에서 공탁금 이자 등 제비용을 제외한 공탁출연금으로 조성됨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 검색일자: 2019. 4. 2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185&efYd=20160101#0000>

- 일부는 「공탁법」 제30조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근거,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를 통해 조성되나 그 비중은 크지 않음

〈표 II-2〉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조성: 「공탁법」 제19조, 제29조

제19조(출연금)

-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다.
-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 검색일자: 2019. 4. 2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185&efYd=20160101#0000>

□ (기금의 용도) 「공탁법」 제31조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²⁾

-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 조정제도의 운용
-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 검색일자: 2019. 4. 2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185&efYd=20160101#0000>

- 구체적으로 소년보호지원사업, 민원서비스개선사업, 사법서비스향상사업, 그 외 법원행정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이 해당함

〈표 II-3〉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 「공탁법」 제31조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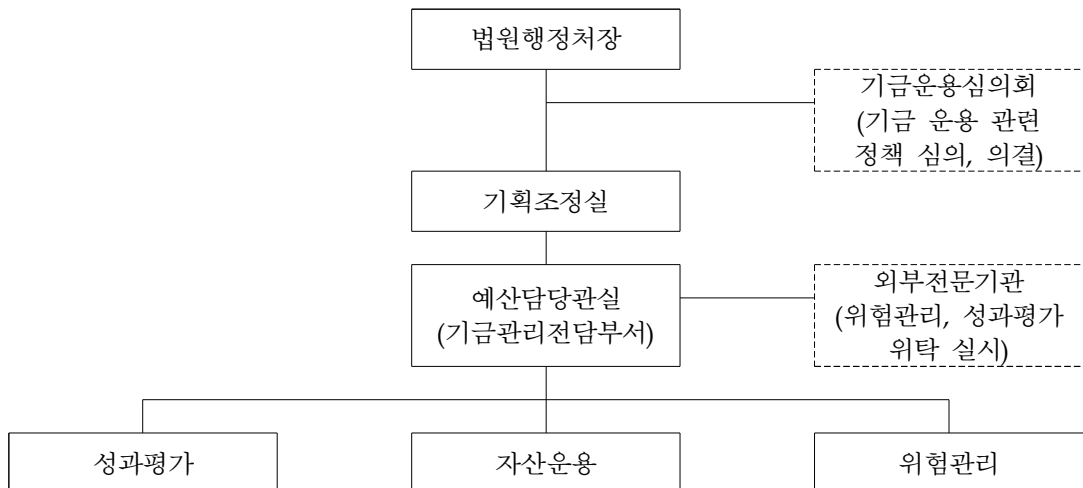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번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 검색일자: 2019. 4. 2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185&efYd=20160101#0000>

- ☐ (조직)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정책 심의기관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용심의회를 두고 있으며, 기금 편성·집행·결산을 위한 실무부서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기금관리전담부서)이 존재

〈표 II-4〉 기금운용기구 조직도



출처: 대법원(2019), 『2019년 기금준치보고서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p. 8.

- (기금 규모) 2019년도 기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규모는 74,567백만원임
- 전년 대비 27.8% 증가하였으며, 2016년 대비 44.5% 증가하였음
 - 기금규모의 확대속도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사법서비스 진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표 II-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규모(2016~2019)

(단위: 백만원, %)

	2016	2017	2018	2019
규모	51,590	50,500	58,336	74,567
전년 대비 증가율	-	-2.1	15.5	27.8

주: 계획금액 기준

출처: 대법원 내부자료, 「기금운용계획」, 각 년도(2016~2019)를 참고하여 표로 작성

2. 기금수입 및 지출현황

가. 수입개요

- (수입 구조) 2019년도 기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계획)은 74,567백만원으로, 민간출연금과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금으로 구성
- (민간출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인 민간출연금은 2019년 기준 64,968백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87.1%에 해당함
 - 전년 대비 24.0% 증가한 12,566백만원 증액되었음
 - (예치금)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수입금은 2019년 기준 9,599백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12.9%에 해당함
 - 전년 대비 61.8% 증가한 3,665백만원 증액되었음

〈표 II-6〉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	
	금액	금액	금액(A)	금액(B)	비중	금액(B-A)	증가율
총계	51,590	50,500	58,336	74,567	100.0	16,231	27.8
기타경상이전수입	51,590	46,561	52,402	64,968	87.1	12,566	24.0
민간출연금	51,590	46,561	52,402	64,968	87.1	12,566	24.0
기타	-	-	-	-	-	-	-
정부예금회수	-	3,939	5,934	9,599	12.9	3,665	61.8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	3,939	5,934	9,599	12.9	3,665	61.8

주: 금액은 계획 금액임

출처: 대법원 내부자료, 「기금운용계획」, 각 년도(2016~2019)를 참고하여 표로 작성

- (출연방식) 기금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탁금 보관은행의 운용수의 일부를 출연 받은 후, 이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재출연하는 구조로 조성되고 있음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 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별로 전년도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공탁 관련 업무원가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확정

〈표 II-7〉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공탁 관련 업무원가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회계법인 등의 의견과 각 보관은행의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출연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에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검색일자: 2019. 4. 2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754&efYd=20181008#0000>

나. 지출현황

- (지출 구조) 2019년도 기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계획)은 74,567백만원으로, 사법제도 개선 및 사법서비스 진흥사업에 사용되며, 일부 기금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운용됨

〈표 II-8〉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 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	
	금액	금액	금액(A)	금액(B)	비중	금액(B-A)	증가율
총계	51,590	50,500	58,336	74,567	100.0	16,231	27.8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49,407	44,466	48,303	52,451	70.3	4,148	8.6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	3,160	2,844	2,935	3,031	4.1	96	3.3
소송구조 지원	5,067	4,560	6,022	6,249	8.4	227	3.8
조정제도 지원	9,628	8,665	9,313	9,915	13.3	602	6.5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3,624	3,262	3,262	3,262	4.4	-	-
사법서비스 향상	27,928	25,135	26,771	29,994	40.2	3,223	12.0
기금운영비		100	94	114	0.2	20	21.3
기금관리비	100	100	94	114	0.2	20	21.3
여유자금운용	2,083	5,934	9,939	22,002	29.5	12,063	121.4
여유자금운용	2,083	5,934	9,939	22,002	29.5	12,063	121.4

주: 금액은 계획 금액임

출처: 대법원 내부자료, 「기금운용계획」, 각 년도(2016~2019)를 참고하여 표로 작성

- (사업비 지출) 「공탁법」에서 규정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되며, 2019년 기준 52,451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이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금액으로 4,148백만원 증액된 것임
- (사업비 지출 구성) 2019년 기준 전체 기금 지출 금액의 40.2%에 해당하는 29,994백만원이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에 사용되며, 조정제도 지원, 소송구조 지원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음
 - 전년 대비 증가율 역시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조정제도 지원, 소송구조 지원 사업 순으로 높음

- (여유자금) 2019년 기준 전체 기금 지출 금액의 29.5%에 해당하는 22,002백만 원이 여유자금으로 운용됨
- (운영비) 기금운영비는 전체 기금 지출 금액의 0.2% 수준인 114백만원임
- 여유자금운용은 전년 대비 121.4%, 기금운영비는 전년 대비 21.3%로 사업비 증가율(전년 대비 8.6%)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이 특징임

□ 수입대비 지출이 과소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여유자금이 급증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 계획에 따르면 전체 기금 규모 대비 여유자금의 비중은 2016년 4.0%에서 2019년 29.5%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II-9〉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와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출 총계(A)	51,590	50,500	58,336	74,567
여유자금(B)	2,083	5,934	9,939	22,002
여유자금 비중(B/A×100%)	4.0	11.8	17.0	29.5

출처: 대법원 내부자료, 「기금운용계획」, 각 년도(2016~2019)를 참고하여 표로 작성

□ 여유자금 규모를 줄여 적절한 중기가용자산규모를 가져가는 방법으로는 수입액 축소와 지출 증가의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공탁금 출연요율 조정을 통한 수입액 축소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님

- 공탁출연금은 국민의 공탁 출금(회수)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금원이라 할 수 있음³⁾
- 이에 공탁금 출연요율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조정하여 수입액을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여유자금의 급증을 해소하고 적절한 중기가용자산규모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법 서비스진흥기금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추가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적절한 사업 확장이나 신규 사업 발굴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

3) 대법원(2019), 상계서, p. 95.

- 단, 신규 사업 발굴은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여야 하며, 현존하는 타 기금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3. 주요사업 분야

가. 공탁전산시스템 운용

- (사업 목적) 소송 및 비송절차의 전자화 추세에 맞추어, 공탁에 있어서도 공탁소 방문을 배제한 전자공탁을 시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⁴⁾
 - 공탁업무의 전자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 능력 향상과 사법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국민의 편의 증진을 꾀함
 - 또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탁업무의 진행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법원 신뢰도 제고에 기여
- (사업 근거) 「공탁법」 제31조 1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표 II-10〉 공탁전산시스템 운용 사업 근거

- 공탁법 -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 국가정보화기본법 -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2019), 『2019년 기금존치보고서-사법서비스진흥기금-』, pp. 15~16에서 발췌하여 표로 작성

4) 대법원(2019), 『2019년 기금존치보고서-사법서비스진흥기금-』, p. 14.

- (사업 내용) 공탁정보시스템 운영, 공탁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이 주요 사업으로 대법원이 직접 수행
 - 구체적으로 공탁업무처리를 위한 공탁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감리용역, UHD 사업, 공탁전산장비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공탁시스템 보안관계 위탁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임차료), 전자공탁 백신(AOS) 사용권 구매, 공탁시스템 SMS 전송서비스 이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⁵⁾

나. 소송구조지원

- (사업 목적)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⁶⁾
 - 사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서비스 수준 향상
- (사업 근거) 「공탁법」 제31조 2호, 「민사소송법」 제12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표 II-11〉 소송구조지원 사업 근거

- 공탁법 -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 민사소송법 -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준용)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2019), 『2019년 기금준치보고서-사법서비스진흥기금-』, pp. 23~25에서 발췌하여 표로 작성

5) 대법원(2019), 상게서, p. 15.

6) 대법원(2019), 상게서, p. 22.

- (사업 내용) 일반 소송구조 지원,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대법원이 직접 수행
 - (일반 소송구조 지원) 구체적으로 변호사 보수 지급 요구액 지불, 인지대·송달료 등 변호사 보수 이외의 재판 비용 지원, 소송구조제도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을 사용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원)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를 지급하는 데 기금을 사용

다. 조정제도지원

- (사업 목적)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분쟁당사자들의 원만한 사건해결을 모색하고, 나아가 법원의 사건부담을 감소시켜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함⁷⁾
 - 조정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원만한 사건해결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됨
 -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당사자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정 성립에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법원의 사건 부담을 완화하여 충실한 심리가 가능케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
- (사업 근거) 「공탁법」 제31조 3호, 「민사조정법」 제12조, 「민사 및 가사조정법」 제4조, 제10조

〈표 II-12〉 조정제도지원 사업 근거

- 공탁법 -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3. 조정제도의 운용

- 조정법 -

제12조(조정위원회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회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7) 대법원(2019), 상게서, p.30.

－ 민사 및 가사조정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

제4조(조정위원의 위촉)

- ① 법원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 사건 수,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사람의 수, 연령 및 직업분포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인원수의 조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④ 법원장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교수,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조정위원을 다수 위촉하여 분쟁의 적절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법원장은 조정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조정위원의 참여도, 성실성, 조정사건 처리 능력, 성품과 건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위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임기 중 조정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조정위원은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조정기관 간의 업무분장)

- ① 조정담당판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건을 직접 처리함이 상당하다.
 1. 조정신청사건. 다만, 조정신청사건 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심하여 즉일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사건은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이하 후략)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건을 처리함이 상당하다.
 1. 다수의 분쟁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건

(이하 후략)
- ③ 수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조정회부사건을 직접 처리함이 상당하다.
 1.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이하 후략)

출처: 대법원(2019), 『2019년 기금존치보고서-사법서비스진흥기금-』, pp. 31~34에서 발췌하여 표로 작성

- ☐ (사업 내용) 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이 직접 수행
- (조정위원 수당 지급) 일반조정위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외부 연계기관과의 조정 활성화를 위한 법원연계조정제도를 운영
 - (각급 법원조정센터 운영) 상임조정위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조정센터 운영 및 센터직원 인건비 지급
 - (조정위원 교육) 각급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정위원 교육 세미나 비용 지원

- (상근조정위원회제도 운영) 조정위원이 매일 또는 특정 요일에 정기적으로 지정 조정실에 출근하여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급

라.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 (사업 목적) 법률보호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분야 복지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⁸⁾
 - 경제적 빈곤, 제도의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취약계층에 대해 법률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법률구조단체를 지원하여 충실하고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인권을 보호하고 법률분야 복지서비스 증진,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가정의 사회 안정을 유도
- (사업 근거) 「공탁법」 제31조 4호, 「법률구조법」 제2조의2,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표 II-13〉 법률구조단체 지원 사업 근거

- 공탁법 -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 법률구조법 -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이하 후략)

출처: 대법원(2019), 『2019년 기금준치보고서-사법서비스진흥기금-』, pp. 39~40에서 발췌하여 표로 작성

8) 대법원(2019), 상게서, p. 38.

- (사업 내용) 법률보호취약계층에 대해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을 대법원이 경상보조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
 - 지원하는 법률구조단체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구조건수 및 지원 금액 측면에서 가장 비중이 큼 (2019년도 계획 기준 13,292건, 2,903백만원 규모)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는 2019년도 계획 기준 180백만원 규모로 지원

마. 사법서비스 향상

- (사업 목적)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알권리 강화, 대국민 소통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구현하기 위함⁹⁾
 - (기능별 분류)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은 기능별로 크게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 사법교육 및 대국민소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1)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 (사업 목적) 가사·소년보호재판에 대한 비용지원 등을 통해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¹⁰⁾
 -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 지원을 통해 가사비송사건(성년후견, 친권자 지정청구, 양육자 지정청구, 성본변경청구)의 활성화 및 실질화¹¹⁾
 - 동 사업을 통해 가사 및 소년사건 당사자들의 충실한 보호를 지원하며, 이혼 당사자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¹²⁾
- (사업 근거) 「공탁법」 제31조 6호,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소년법」 제41조, 「민법」 제836조의2 제1항 등

9) 대법원 내부자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10) 대법원(2019), 상계서, p. 46.

11) 대법원(2019), 상계서, p. 47.

12) 대법원(2019), 상계서, p. 47.

〈표 II-14〉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근거

－ 공탁법 －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가사소송법 －

제37조의2(절차의 구조)

- ①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節次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년법 －

제41조(비용의 보조)

제18조제1항 제1호·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제1항 제1호·제6호·제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처분은 제외한다)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

－ 민법 －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2019), 『2019년 기금준치보고서-사법서비스진흥기금-』, pp. 47~5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소년법」, 「민법」에서 발췌하여 표로 작성(검색일자: 2019. 4. 29.)

□ (사업 내용)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서 대법원 및 각급법원이 직접 수행

○ 가사비송 절차구조 비용지원 및 소년보호재판 지원

- 가사비송사건에도 소송구조에 유사한 절차구조를 시행하기 위해, 친권자 또는 양육자 지정청구, 성분변경청구 등의 사건에서의 절차구조비용을 지원함
- 소년보호재판을 위한 외부 전문가 비용 및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비용, 내적 강화 방식의 새로운 교정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원¹³⁾

13) 그 밖에도 청소년참여법정, 소년캠프 지원, 소년보호재판 및 통고제도 안내 비용 지원 사업 등을 행하고 있음

- 이혼 전 상담위원 운영
 - 이혼 신청자에게 이혼 후 건강한 사회 적응과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을 돕는 심리학·정신의학 전문가를 이혼 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고, 상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간담회 등을 통해 적정한 상담을 도모함
- 가사재판 안내를 위한 책자 발간 등 지원
 - 양육수첩, 외국인(다문화가정)을 위한 안내책자, 부모책자 등을 발간하고, 가사재판실무연구회 운영을 지원
- 성년후견제도 지원
 -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비용 및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
- 치유적 사법제도(힐링코트) 지원
 - 자녀양육안내 실시 비용 지원, 이혼당사자 및 미성년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가사사건 관련 전용상담실 운용, 힐링코트 교육·워크숍 지원 등
- 아동보호절차 지원
 - 아동보호사건 치료위탁·상담위탁 비용 지원, 국선보조인 선임 비용 지원, 아동보호사건 출장조사 등

2)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 ☐ (사업 목적) 사회적 약자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국민의 사법정보 접근성 및 사법참여도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¹⁴⁾
 - 장애인, 이주민, 외국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물적·인적 환경을 구축
- ☐ (사업 근거) 「공탁법」 제31조 6호, 「장애인복지법」 제9조,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등

14) 대법원(2019), 상게서, p. 57을 참고

〈표 II-15〉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근거

－ 공탁법 －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장애인복지법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형사소송법 －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각호 생략)

-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2019), 『2019년 기금준치보고서-사법서비스진흥기금-』, pp. 57~5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에서 발췌하여 표로 작성(검색일자: 2019. 4. 29.)

□ (사업 내용)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서 대법원 및 각급법원이 직접 수행

-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확대 설치하고, 외국인·이주민을 대상으로 통역 및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

- 관련 세부사업으로 통역안내로봇 운영, 법률용어 수화통역 개발 및 동영상 제작 사업 등이 있음

-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 관련 세부사업으로 서류 양식 및 소송절차안내문 번역 발간, 민사·가사·행정·가족관계 사건 소송절차안내용 핸드북 발간, 외국어 병기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설명회 및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보조기구 비치 사업 등이 있음

- 이외에도 판결서 공개를 위한 전 단계 사업으로서 판결서 등에 대한 비실명 처리 사업¹⁵⁾, 지역사회 사법참여 및 피드백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

3)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 및 대국민 소통 지원 사업

- (사업 목적) 사법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의 권익 및 편의 증진을 꾀하고, 사법부의 대국민 신뢰 형성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법제도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¹⁶⁾
- (사업 근거) 「공탁법」 제31조 6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7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표 II-16〉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 및 대국민 소통 지원 사업 근거

- 공탁법 -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27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

- ① 규칙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호 생략)
- ②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호 생략)
- ③ 종이기록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이기록에도 당해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15) 판결서 등의 비실명 처리를 전담하는 판결서 비실명화 사업소를 설립하여 비실명 처리를 위탁

16) 대법원(2019), 상게서, p. 65를 참고

- ④ 종이기록사건에서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출력서면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참고용으로 제출한 경우 그러한 취지를 표시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 안내문의 발송

가. 대상 사건 및 대상자

- (1)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전 및 만 4년 전인 해에 수리된 변제공탁사건 및 집행공탁사건(예: 2009년 4월에 통지할 사건은 2004년 및 2006년에 수리된 사건)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의 피공탁자

(이하 중략)

나. 대상 사건의 조사 및 안내문 발송 시기

매년 4. 1.부터 5. 31. 사이에 대상 사건에 대하여 발송대상자의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상으로 조회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

(이하 후략)

출처: 대법원(2019), 『2019년 기금준치보고서-사법서비스진흥기금-』, pp. 57~5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에서 발췌하여 표로 작성(검색일자: 2019. 4. 29.)

□ (사업 내용)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서 대법원 및 각급법원이 직접 수행

- (사건기록전자화 사업) 종이로 된 사건기록을 전자문서화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사건기록의 전자보관을 가능하게 하여 소송절차 진행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 (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 운영) 각급 법원의 대표전화로 인입되는 민원전화를 민간 전문운영업체에 위탁하여 전문 전화상담원이 응대
 - 직원들의 민원전화 응대 부담 감소로 사법서비스 품질 제고, 대민 업무 친절도 향상을 통한 법원이미지 개선 효과
-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인 국민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
 - 관련 세부사업으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신문광고 비용 지원 사업을 수행
- (사법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학생 법 교육 지원, 교사 사법교육 직무 연수, 다문화·장애인 가정 초청 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대국민 사법서비스에 대한 신뢰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효과
- (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 지원) 시민사법위원회, 시민사법참여단, 법문화체험 컨퍼런스, 시민사법모니터링 실시

Ⅲ.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주요사업 영역별 쟁점

1. 개요

- 전술한 바와 같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사업영역은 기금운영의 기반이 되는 ① 공탁제도 개선 및 시스템 개발운용, 사법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소송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② 소송구조제도 운영, 대체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③ 조정제도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의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구조사업을 지원하는 ④ 법률구조단체지원, 그리고 청소년 후견기능 및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⑤ 사법서비스 향상 부문으로 대별할 수 있음

〈표 Ⅲ-1〉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주요사업 분야와 활동



- 소송구조, 조정제도, 법률구조단체 지원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사법적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

- 사법서비스 향상 및 공탁제도 개선 및 시스템 운용 분야는 범(汎)사법적 기능 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 사법서비스 향상부문은 공식적인 사법적 판단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이나, 완료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기능으로 구성
- 이 밖에 기금의 기반이 되는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시스템 개발운용, 기금운용 및 관리기능 수행의 주요 재원으로 사법서비스 진흥기금이 활용되고 있음
- 신설기금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별 현황 검토와 함께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주요사업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이란 정부의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되는 재정활동으로, 재정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법서비스진흥기금도 국민들이 향유하는 사법서비스의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설치목적 및 역할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와 미래 수요에 대해 논의를 제시함으로써, 발전방안을 모색

2.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

- 공탁전산시스템은 공탁금 신청, 수납, 출급 등 공탁 고유 업무시스템과 공탁은행에 공탁금 수납, 출급 정보 교환을 위한 연계시스템, 인터넷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법원 홈페이지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발 및 운용도 사법서비스 진흥기금의 주요 사업영역 중 하나로 수행되고 있음
-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주요 사업영역 중 하나로 수행되고 있음
 - 공탁관련 사무 및 운영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용자들의 편의를 강화하는 기반 인프라로서 공탁전산시스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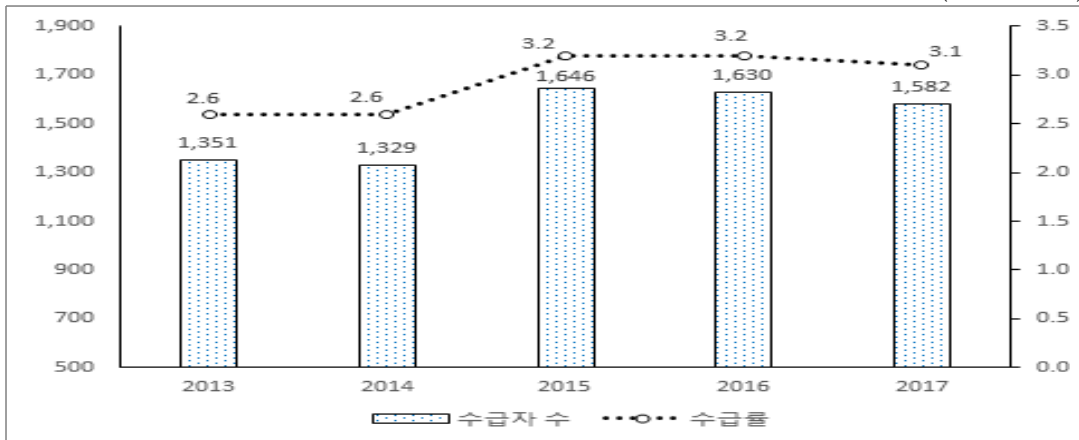
- 중장기적으로 전자법원을 지향하는 사법시스템 개선노력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자소송을 기반으로 모든 관련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전자법원 구현의 세부과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국민 및 법원의 요구와 정보공유에 대한 연계기관들의 수요 등을 검토하고, 공탁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수단으로서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필요성에 대한 정기적인 수요점검, 기술적 타당성 검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통한 사법부 신뢰성 유지 및 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3. 소송구조지원

- 소송구조지원은 일반소송구조지원과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지원으로 구분됨
- 현재 일반소송구조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기금 설립 이후 수혜규모가 매년 3천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3년 평균 약 35%)
-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나, 150만명(2017년 기준, 158만 2천명)이 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 국민 대비 비중은 3%를 넘어서고 있음

[그림 Ⅲ-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단위: 천명, %)



주: 수급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 전 국민 수

자료: e나라지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검색일자: 2019. 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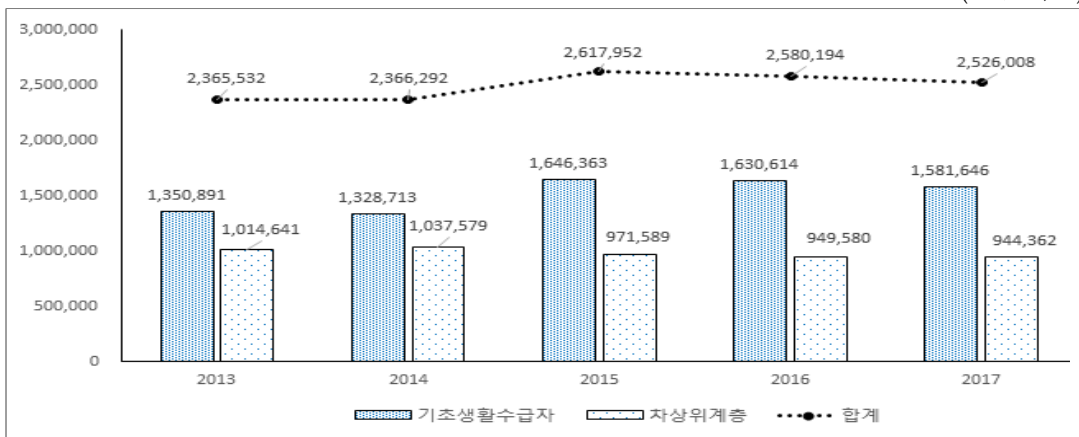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60&board_cd=INDX_001

□ 소송구조지원 사업부문에서 중요한 쟁점은 수혜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지에 있음

- 최근 3년간 수혜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법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수혜규모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집단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룹임

[그림 Ⅲ-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차상위계층 규모

(단위: 명, %)



주: 연말(12월) 기준 수급자 수

자료: 복지로, 「사회보장통계-차상위계층 수급자 수(중복 제거)」, 검색일자: 2019. 5. 15.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sociquastat/retrieveSociGuaStatList.do>

□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송구조 지원 대상으로 차상위 계층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선되었음

- 소송구조신청 처리결과 현황자료(박주민 의원실, 2017.10.7.)에 따르면, 접수건수 대비 인용건수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음
- 차상위계층을 포함할 경우 수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용률도 증가할 것임
- 현재 인용률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소송구조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재원의 한정성 등을 고려한 보수적 판단성향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제시되고 있음
- 차상위계층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수혜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표 III-2〉 소송구조신청 처리결과 현황

(단위: 건, %)

연도	접수	처리				인용률	기각률
		인용	기각	기타	합계		
2010	5,310	3,507	1,250	265	5,022	69.8	24.9
2011	5,803	3,715	1,351	250	5,316	69.9	25.4
2012	7,045	4,516	1,464	329	6,309	71.6	23.2
2013	8,930	6,045	1,909	417	8,371	72.2	22.8
2014	9,708	6,143	2,505	560	9,208	66.7	27.2
2015	9,666	6,244	2,783	614	9,641	64.8	28.9
2016	7,952	4,315	3,144	488	7,947	54.3	39.6
2017	6,330	2,890	2,750	496	6,136	47.1	44.8

자료: 대법원 『사법연감』, 각 년도(2010~2017)에서 발췌하여 작성

□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지원사업의 경우 소송구조 인용사건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기적으로도 지원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4년간 인용사건의 증가율은 7.4%이었으며,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인용사건 증가율은 21.0%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송구조 수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아동·가정, 금융·부채, 고용·노동 분야이며,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됨

〈표 Ⅲ-3〉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소송구조 인용사건 규모변화

(단위: 건,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인용건수	1,288	1,237	1,318	1,594	7.4%
전년 대비 증가율	-	-4.0%	+6.5%	+21.0%	

자료: 대법원 내부자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초안)」

〈표 Ⅲ-4〉 연도별 개인파산 · 개인회생 · 면책 사건의 접수건수, 처리건수 및 인용률

(단위: 건, %)

종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인 파산	접수	84,725	69,754	61,546	56,983	55,467	53,865	50,288	44,246
	처리	83,862	82,119	75,552	61,095	58,808	58,162	57,584	47,007
	인용	75,811	73,554	68,265	56,690	55,096	54,566	54,607	44,215
	인용률 ¹⁾	90.4	89.6	90.4	92.8	93.7	93.8	94.8	94.1
면책	접수	84,710	69,741	61,508	56,940	55,418	53,825	50,208	43,980
	처리	90,270	83,755	78,013	63,697	60,672	55,502	55,521	50,462
	인용	81,109	74,257	69,174	56,717	53,593	48,828	48,971	43,861
	인용률 ²⁾	89.9	88.7	88.7	89.0	88.3	88.0	88.2	86.9
개인 회생	접수	46,972	65,171	90,368	105,885	110,707	100,096	90,400	81,592
	처리	50,030	59,650	81,845	88,738	98,468	110,065	100,155	82,351
	인용	41,338	49,173	71,700	78,788	86,739	95,953	83,917	69,368
	인용률 ³⁾	82.6	82.4	87.6	88.8	88.1	87.2	83.8	84.2

주: 1) 개인파산사건 인용률은 각 연도별 처리 건수 대비 선고 전 인용 건수×100(%)로 산출

2) 면책사건 인용률은 각 연도별 처리 건수 대비 인용 건수×100(%)로 산출

3) 개인회생사건 인용률은 각 연도별 개시 결정 전 처리 건수 대비 인용 건수×100(%)로 산출

자료: 대법원 「사법연감」, 각 연도(2010~2017)에서 발췌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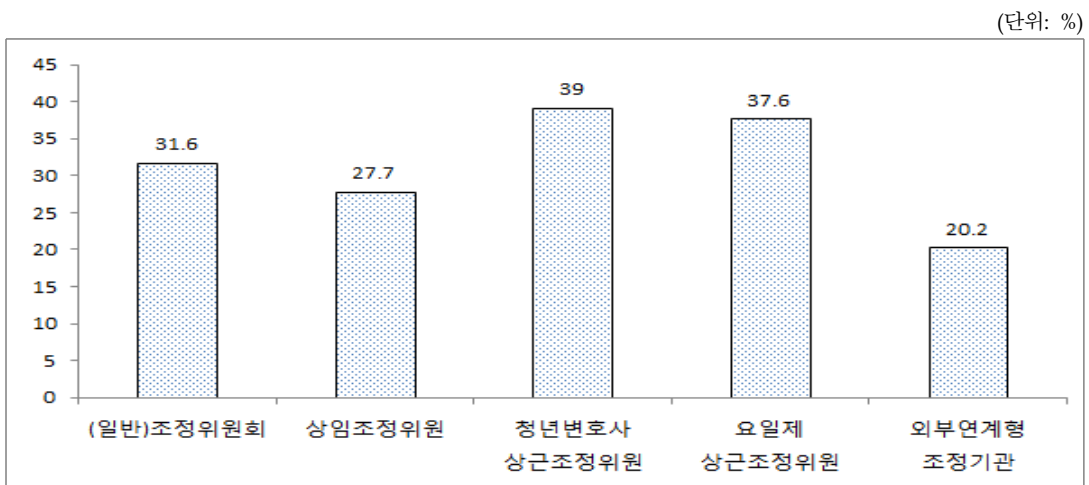
□ 일반소송구조지원의 수혜범위의 확대 및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소송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소송지원이 필요한 수혜대상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지식의 미비로 인한 문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따라서 소송구조 지원과 함께 사전적 단계에서 공적 서비스의 필요성 제기

4. 조정제도지원

- 조기조정제도는 일반적으로 민사와 가사사건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재판절차를 보완 및 대체하는 현대적 사법행위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조정제도는 분쟁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권고하여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지칭함
 - 당사자 입증주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사회 내에서 형성되어 있는 인적 관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정식재판절차를 거치는 사법적 의사결정에 의존할 경우, 시간 소요 및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연간 민사소송 건수가 백만건을 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정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당사자의 입증주의 부담 감소, 시간적 효율성 제고, 사회적 비용 감소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성과를 위해서는 조정제도에 대한 홍보, 조정 실익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조정 품질(quality)의 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함

[그림 III-3] 조정 유형별 성공률



자료: 대법원 내부자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초안)」

- 현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직무수행 법원에서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다른 업무와 겸직이 제한되는 변호사 상근조정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법률가를 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법률관계의 정확한 파악 및 이해가 없이 조정하는 경우, 조정이 성공하더라도 당사자들의 불만은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임
 - 변호사 상근조정위원들에게 고분쟁성, 고난이도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조정성공률은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줌

〈표 Ⅲ-5〉 조정위원 분류

일반조정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법무사, 의사, 전직 공무원, 기업인, 금융인, 교육인 등 각계 각층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 법원장이 위촉, 임기 2년 ▪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을 받아 조정에 필요한 조사,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기한 의견개진 등 조정에 관여 ▪ 조정에 관한 결정권한은 없음
상근조정 전담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조정실에 출근하여 배당된 3~4건의 조정사건을 처리 ▪ 1인 책임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전 조사, 조정기일의 운영, 당사자들과 회합, 조정안의 구상, 조정의 시도하고 합의가 성립된 경우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 ▪ 조정에 관한 결정권한은 없음(조정조서를 작성해 조정담당판사에게 제출)
상임조정위원 (법원조정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자격자 중 법조경력 10년 이상, 3년 이상의 조정위원의 경력 / 겸직 금지 ▪ 법원행정처장이 위촉, 임기 2년 (12개의 조정센터에 총 35명 위촉) ▪ 주로 민사합의·항소사건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을 담당 ▪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짐
외부기관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상사중재원, 서울변호사회조정센터, 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등 외부기관과 연계 ▪ 일반조정위원의 역할과 동일
수소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여 직접 조정을 담당

자료: 대법원 내부자료, 「'20년 예산안 2차심의 자료」

- 법률가 상근조정위원의 위촉을 확대하여 조정제도를 운영할 경우 조정성공률을 유지 및 개선할 수 있으며, 공식적 재판 이전에 분쟁해소를 통해 수소법원의 업무 경감, 재판기능이 조정으로 해결 불가능한 사건에 집중하여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조정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역량 확보 및 강화를 위한 조정위원 위촉, 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
 - 현재 조정수당체계가 현실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합리화 또는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상근조정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직무수행법원에 상주하여 조정사건을 처리
 - 조정수당은 월 400만원(세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직무수행법원에 상주하여야 하므로,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제한됨
- 현재 조정위원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증액 또는 감액 지급 사유가 없는 한 사건당¹⁷⁾ 50,000원 이내를 지급함
 - 기일 연기 또는 속행, 반소, 변론 병합된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봄

〈표 III-6〉 조정위원 수당 지급기준(2015~2019)

구분	1인 (책임조정방식)		2~3인(위원회 방식)	
최초 1건	7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40,000원 이내
다건 처리	추가 1건당 50,000원 이내	추가 1건당 30,000원 이내	추가 1건당 30,000원 이내	추가 1건당 20,000원 이내
1인당 1일 상한	200,000원 이내	150,000원 이내	150,000원 이내	120,000원 이내
적정처리건수	1일 4건 이상	1일 5건 이상	1일 5건 이상	1일 5건 이상

자료: 대법원 내부자료, 「조정위원 수당 지급기준」, 각 년도(2015~2019).

- 최근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송건수가 많은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합의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주권자들 간의 민주적 합의 활성화로서의 조정제도를 강조하는 관점도 존재함

17) 대법원 내부자료(2019), 「2019년 조정위원 수당 지급기준」

- 조정 활성화는 법관들의 재판부담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수요를 조정하여 만족스러운 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조정품질 제고방안을 고민할 필요 있음
 - 아직 조정신청률이 1% 이하인 상황이며, 이는 홍보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조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실효성 강화 노력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조정위원들의 조정수당 현실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
 - 조정수당의 현실화는 해외사례 및 국내실정을 반영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해당 사건의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국가 등이 있으며, 프랑스는 법원연계형의 경우 300유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정수당의 현실화 논의의 출발점은 조정품질 제고, 전문적 조정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조정수당 현실화는 조정동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으나, 수당의 현실화는 조정의 성과관리 개선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
 - 조정의 성과관리를 통해 조정위원의 성과, 성과의 품질관리가 가능토록 운영되어야 함
- 현재 조정성공률 이외에 조정제도 운영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제도운영체계의 개선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조정성공률이 반드시 조정품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
 - 조정은 되었으나, 양 분쟁당사자들은 결과에 모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 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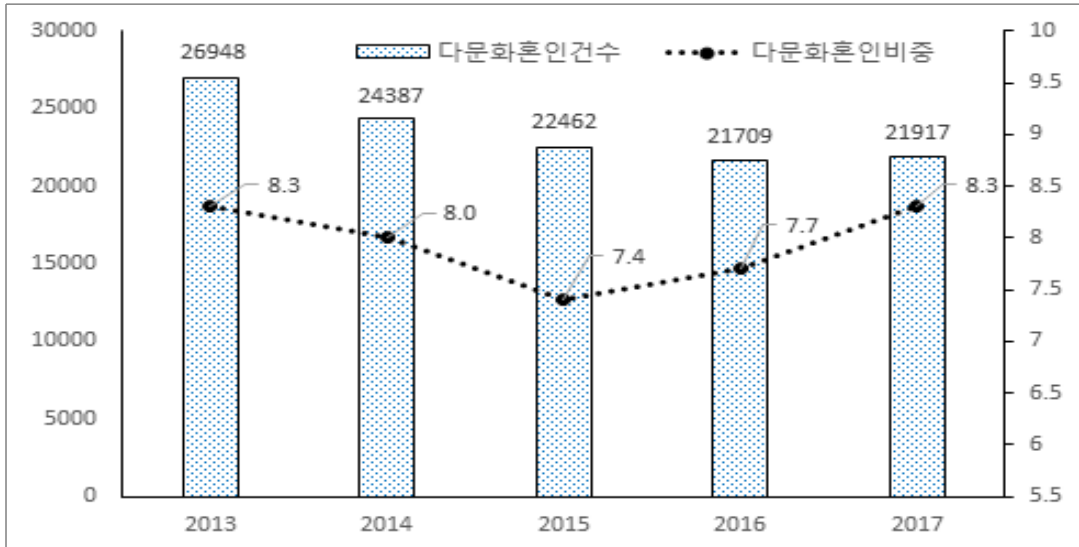
5.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은 법원이 직접 감당할 수 없는 사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법률구조단체가 수행하는 법률보호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사업(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 지원)을 지원하여 법률복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구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III-4] 다문화혼인건수 및 혼인비중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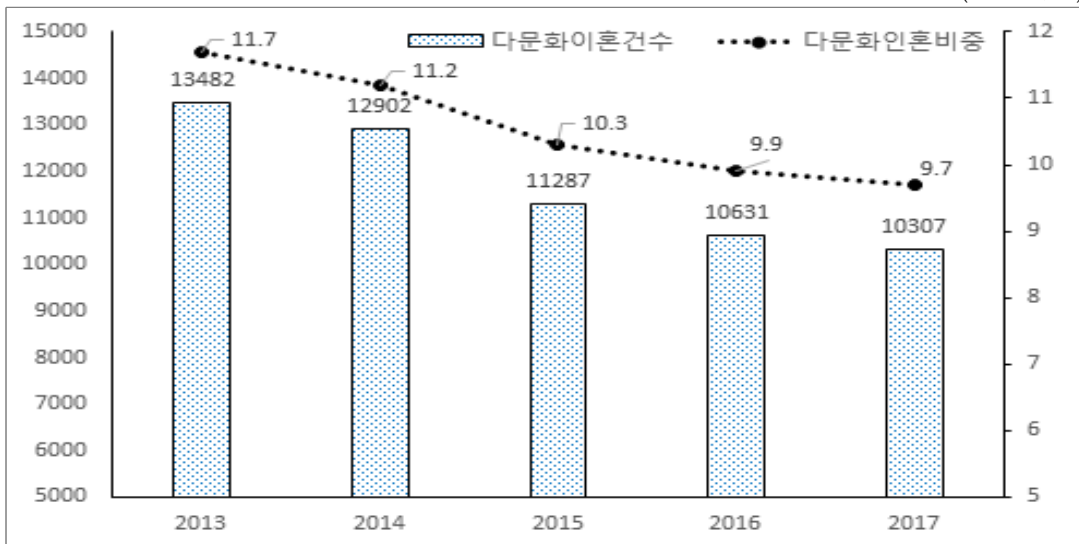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 다문화 혼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B0002&conn_path=I3, 추출일자: 2019. 5. 15.

[그림 III-5] 다문화이혼건수 및 이혼비중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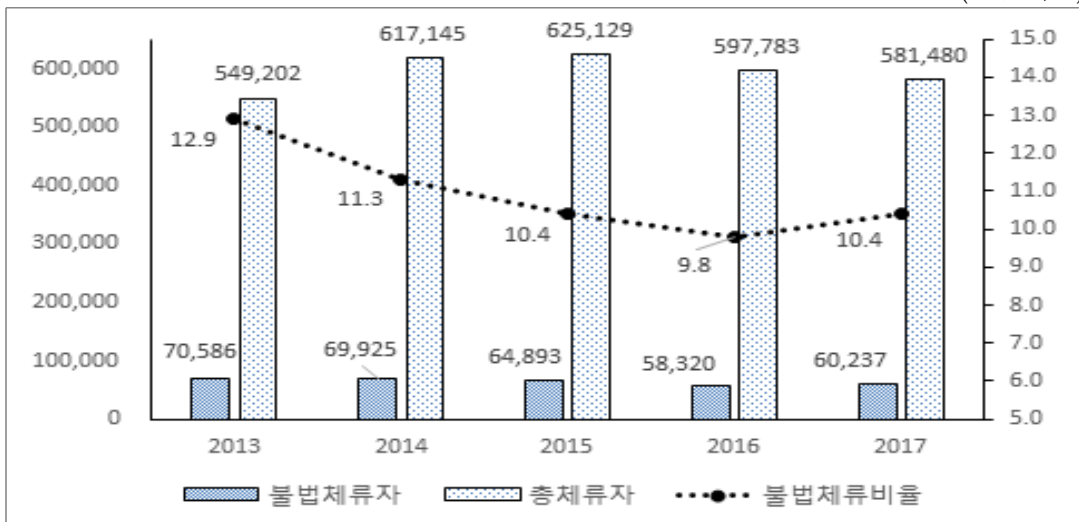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 다문화 이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B0004&conn_path=I3, 추출일자: 2019. 5. 15.

- 법률구조공단의 사업은 가족관계 미등록자, 보호대상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개인회생파산신청자, 재산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구조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회경제활동 및 사회통합의 기반인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조기 적응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인권보호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법적 분쟁의 직접적 피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발생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경우에도 소외계층 법률구조 사업을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법률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 범죄피해자 등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함
 -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공적 사법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그림 III-6] 총체류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 및 비중

(단위: 건,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년도(2013~2017).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다문화가정, 취약 계층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사문제 및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지방의 법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소송구조사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사사건,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사사건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최근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구조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표 Ⅲ-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건수 및 예산소진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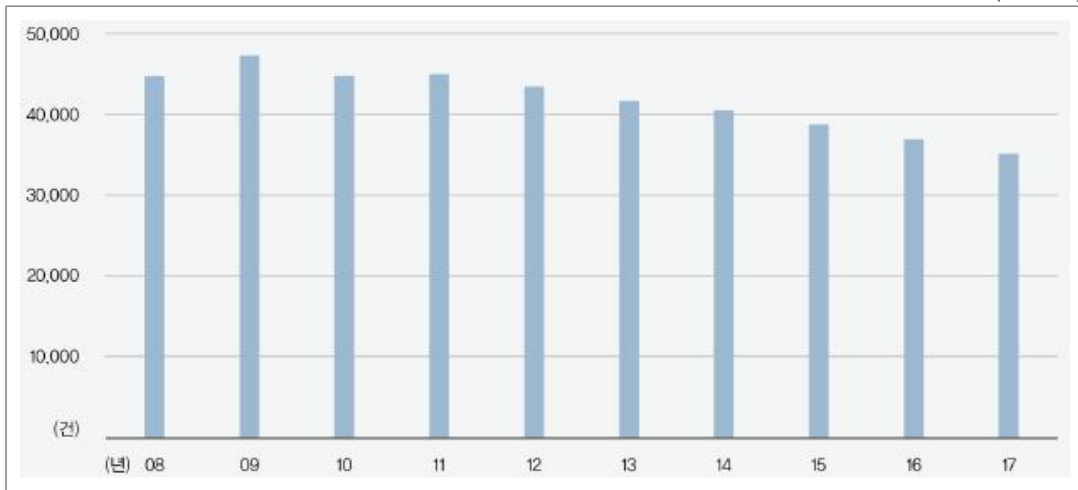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다문화가정	108	108	82	50	46	46
취약계층	197	198	163	100	92	90
예산소진시기	-	-	11월	8월	9월	7월

주: 대법원 지원금에 따른 소송구조 건수만을 계산함
 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공 자료

[그림 Ⅲ-7] 연도별 제1심 재판상 이혼사건의 추이(접수 기준)

(단위: 건)



자료: 대법원(2018), 『2018 사법연감(2017.1.~2017.12.)』, p. 577

- 가사소송을 중심으로 법률구조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경우 가사소송 당사자들의 자녀접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접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접견시설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법원 내 접견시설의 경우 공공시설물이라는 안정성이 있으나, 접견 환경의 경직성 완화 등의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법률구조 지원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대한변협, 가정법률상담소)의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에는 지원건수를 조정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지원규모 및 건수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지원규모보다 지원수요가 더 많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6. 사법서비스 향상

- 사법서비스 향상사업은 가사재판 분야에서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 사회적 약자 및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민원서비스 개선 및 사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을 포함하고 있음

가. 감호 및 후견적 기능

- 후견적 기능과 관련된 사업에는 가사비송 절차구조 비용지원 및 소년보호재판 지원, 가사상담제도 운영지원, 책자발간 및 실무연구회 지원, 성년후견제도 지원, 치유적 사법제도, 아동보호절차 지원, 소년법관 및 조사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수혜대상은 소년, 이혼소송에 관련된 당사자 및 자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위탁 보호하는 위탁보호위원 및 기관, 가사 및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청소년)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함
-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장·단기 보호관찰처분 이외에 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결정을 하고 있음
 - 1호, 6호 처분에 따른 감호 위탁시설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체계에 대한 쟁점들이 있음

〈표 III-8〉 최근 5년간 연령별 보호처분건수

(단위: 건)

연령	2013	2014	2015	2016	2017
10세	42	48	57	74	154
11세	136	125	213	247	271
12세	765	528	550	640	748
13세	3,391	2,193	2,196	1,897	2,192
14세	4,247	3,318	3,012	2,469	2,389
15세	4,994	3,767	4,154	3,585	3,697
16세	6,491	4,992	5,386	5,288	5,026
17세	6,943	5,021	5,539	5,146	5,441
18세	4,940	4,536	4,802	4,170	3,671
19세	3	1	2	10	794
계	31,952	24,529	25,911	23,526	24,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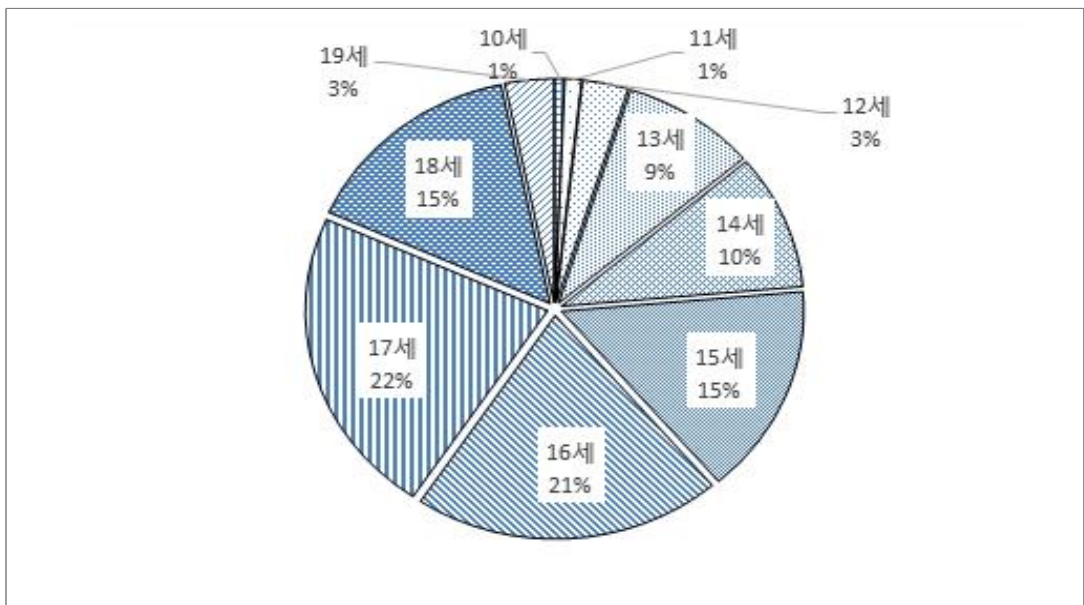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사법연감(통계)」, 각 년도.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추출일자: 2019. 5. 15.

- 연령별 보호처분건수를 비교하면, 10대 후반 청소년들에 비해 13~15세 구간의 처분건수도 상당한 규모로 관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기 사회 적응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암시
 - 지역별 보호가정 및 기관의 수용규모 및 재정적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기본생활지원 이외에 상담, 의료, 문화향유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보호가정에 위탁하는 경우, 일일생활지도와 사회적응 지원역량의 수준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표준화 및 균질화 노력의 필요성 있음

- 교육비 지원에 따른 성과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목적이나 계획에 따라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오히려 감호위탁시설을 운영하는 보호위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위탁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품질을 제고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생활지도 및 교육 매뉴얼 및 지침 등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감호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I-8] 2017년 보호처분 건수 연령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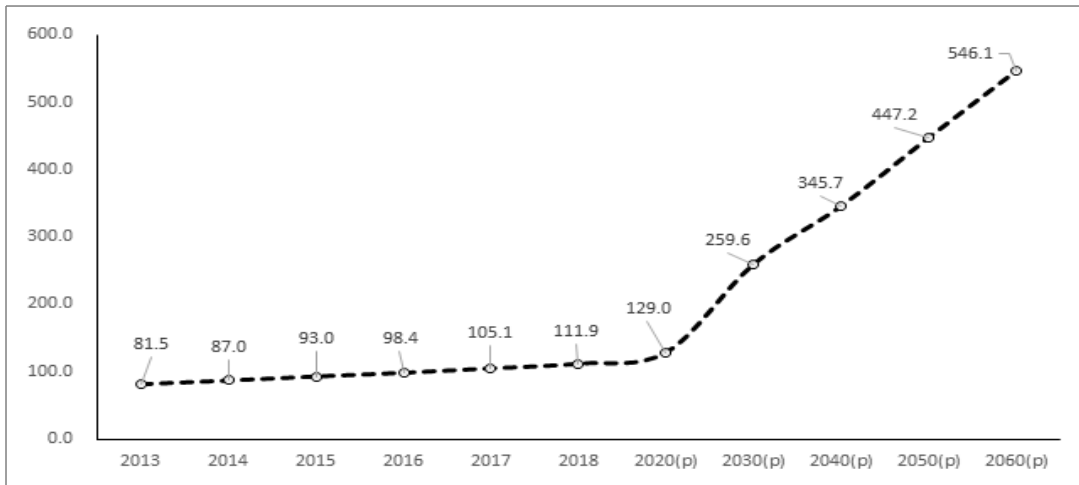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사법연감(통계)」, 2017년도.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추출일자: 2019. 5. 15.

- (성년후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성년후견제도 강화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림 III-9] 노령화 지수(추정 포함)



주: 1.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14세 이하 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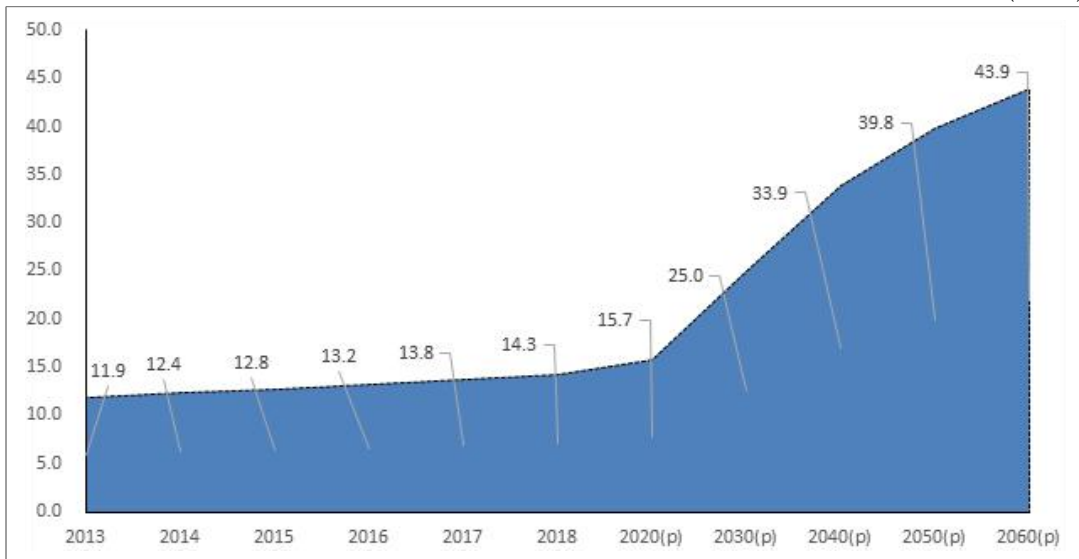
2. 2020년 이후로는 프로젝트 수치임

자료: 통계청, 주요인구지표(전국)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heckFlag=N, 추출일자: 2019. 5. 15.

[그림 III-10] 고령인구비율(추정 포함)

(단위:%)



주: 1.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 인구/총인구×100(%)

2. 2020년 이후로는 프로젝트 수치임

자료: 통계청, 주요인구지표(전국)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heckFlag=N, 추출일자: 2019. 5. 15.

- 2018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은 총인구의 14.3% 수준이며, 20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현재는 15% 내외 수준이나, 2020년 이후 급증하면서 2060년에는 약 3배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법체계상 다양한 제도 변화(개정, 신설, 폐지)를 발생시키며,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것임
-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환자 수 및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층 성년후견인 지원제도 운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 확대

〈표 III-9〉 치매환자 수 및 유병률 전망

(단위: 명, %)

연도	노인인구 수	치매환자	
		환자 수	유병률
2015	6,552,528	625,259	9.54%
2016	6,781,159	661,707	9.76%
2017	7,066,201	705,473	9.98%
2018	7,389,480	750,488	10.16%
2019	7,693,721	791,228	10.28%
2020	8,133,668	836,834	10.29%
2030	12,955,095	1,367,652	10.56%
2040	17,120,010	2,176,558	12.71%
2050	18,812,645	3,026,592	16.09%
2060	18,536,378	3,323,033	17.93%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치매현황」, 추출일자: 2019. 5. 15.

https://www.nid.or.kr/info/ub_2018.aspx?no=31700

- 성년후견감독사건의 경우, 사건 본인이 질병, 장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인 경우가 대다수인 경우에도 친족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 실질적 후견 사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전문후견인을 공동으로 선임하거나,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실질적 후견기능이 작동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으로부터 지출되는 것으로 보나, 만약 피후견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거나 후견인의 주된 임무가 신상보호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무작정 후견인에게 봉사만을 강요할 수 없음
 - 최근 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확대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대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보수) 후견인에게 일정한 보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교육훈련) 후견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단체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후견인 교육훈련을 통해 후견활동의 품질을 제고
- 현재 후견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규모가 크지 않은 탓에 성과관리가 미흡한 점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사법서비스 향상사업은 가사재판 분야에서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 사회적 약자 및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민원 서비스 개선 및 사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을 포함하고 있음
-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위탁위원이나 시설에 따라 보호의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고, 보호위원이나 시설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 Ⅲ-10〉 담당 법원별 보호소년 수탁기관 수, 위탁보호위원 규모

(단위: 개소, 명)

법원명	보호소년 수탁기관 (6호 처분)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1호 처분)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 (1호 처분)
서울가정법원	6	9	180
부산가정법원	3	8	238
대구가정법원	5	8	138
인천가정법원	8	12	75
광주가정법원	2	16	244
대전가정법원	6	12	83
울산가정법원	3	1	60
의정부지방법원	7	3	35

〈표 III-10〉의 계속

(단위: 개소, 명)

법원명	보호소년 수탁기관 (6호 처분)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1호 처분)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 (1호 처분)
수원가정법원	7	1	57
춘천지방법원	6	6	88
청주지방법원	7	3	72
전주지방법원	2	4	47
창원지방법원	2	6	126
제주지방법원	0	1	12
합계	64	90	1,455

주: 2019. 2. 1.일자 기준
자료: 대법원 내부자료

나.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

- 국민의 사법 접근 향상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물적 환경 구축 및 사법서비스에 용이한 접근이 가능토록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
 - 현재 장애인, 외국인 지원창구를 운영하고,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 외국인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주민 등에 대한 별도의 민원창구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활용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체류외국인 증가, 출신국가의 다양화, 체류 지역의 확장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실시간 대응이 제한적일 수 있어, 통합서비스센터,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채널 신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통역서비스의 품질 차이, 법률지식의 차이 등이 사법 접근권의 만족도 및 품질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체적인 접근권 제공방안을 모색할 필요

〈표 III-11〉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명, %)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특별시	247,108	244,410	266,360	274,957	273,441	267,153
부산광역시	35,049	35,943	38,315	39,991	41,840	42,837
대구광역시	21,922	23,302	25,203	26,141	26,493	26,442
인천광역시	47,305	50,382	55,323	57,669	59,103	62,596
광주광역시	14,492	15,557	17,064	18,455	19,920	21,279
대전광역시	14,571	14,798	15,658	16,416	17,035	17,431
울산광역시	19,247	22,427	25,885	26,183	23,457	20,513
세종특별자치시	2,271	2,462	2,719	3,481	3,745	4,125
경기도	288,251	314,715	352,166	369,665	373,923	381,628
강원도	12,901	13,409	14,443	15,108	15,833	16,949
충청북도	24,830	27,481	30,700	32,637	35,499	36,656
충청남도	46,230	49,937	54,568	56,583	60,353	64,155
전라북도	22,030	23,067	25,086	26,194	27,320	28,588
전라남도	23,602	24,544	28,254	30,566	31,750	31,221
경상북도	40,067	43,499	47,805	49,765	51,351	53,364
경상남도	64,371	69,126	77,778	82,316	81,021	75,136
제주특별자치도	8,736	10,864	14,204	16,960	19,593	21,689
합계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1,161,677	1,171,762
(전년 대비 증가율)		(5.7)	(10.7)	(4.7)	(1.6)	(0.9)

자료: 통계청, 「지역 및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검색일자: 2019. 6. 24.

- 등록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100만명이 넘어선 것으로 확인됨
 - 광역시 및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12년 대비 2017년 등록외국인 규모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 전국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잠재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적을 기준으로 등록외국인 현황을 관찰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이 점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등 상위 3개국 비중도 역시 점감하고 있음

- 등록외국인의 출신의 다양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음
- 상위 10개국 이외 국가출신 등록외국인의 비중이 20% 수준까지 증가
 -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줌

〈표 III-12〉 연도별 등록외국인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계 중국인 비중	34.6	33.5	34.4	33.3	29.4	27.2
상위 3개국 비중	63.1	61.3	61.3	60.9	59.1	57.9
상위 10개국 비중	82.6	82.3	82.5	82.5	81.5	80.7
상위 10개국 이외 국가 등록외국인 비중	17.4	17.7	17.5	17.5	18.5	19.3

주: 비중은 전체 등록외국인 대비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등록외국인을 의미함

연도별 상위 3개국은 한국계중국인, 중국, 베트남으로 동일함

자료: 통계청, 「지역·국적 및 성별 등록외국인 현황」에서 추출하여 저자 작성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추출일자: 2019.06.24.

- 등록외국인의 다양성 증가는 상위 10개국의 구성과 순위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2012년 7위였던 미국출신 등록외국인은 2017년 기준 10위 순위 안에서 벗어난 것으로 관찰되고 있음
 - 이에 반해 네팔, 스리랑카 등이 10위권 내로 진입하고 있음

〈표 III-13〉 등록외국인 상위 10개국의 연도별 변화

순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한국계중국인	한국계중국인	한국계중국인	한국계중국인	한국계중국인	한국계중국인
2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3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4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캄보디아	캄보디아
6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7	미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8	캄보디아	타이	타이	네팔	네팔	네팔
9	일본	미국	네팔	타이	타이	타이
10	타이	일본	미국	스리랑카	스리랑카	스리랑카

자료: 통계청, 「지역·국적 및 성별 등록외국인 현황」에서 추출하여 저자 작성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검색일자: 2019. 6. 24.

- 주요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보다 소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등록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법률민원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 1차적으로 종합민원 신청서식, 안내자료 등을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활동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대안 개발 필요
 - 현재 다누리(다문화가족지원포털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를 통해 13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생활 및 문화관련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
 - 실시간 전화통역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법률전문가가 아닌 언어 전문가에게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법률민원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BBB코리아 등 통역지원 자원봉사를 통해 대응할 수 없는 전문법률민원 통역서비스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법적 권리보호를 위한 사법서비스 잠재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국 국적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외국인 주민은 평균 5.6%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률민원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민원 서비스영역에서도 외국어서비스 확대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도 외국인주민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생활정보안내 표 준안 마련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민원제도혁신과)
 - 통역 및 동행서비스까지 확대방안 논의 중

〈표 Ⅲ-14〉 연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명, %)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국적없는자(A)	1,117,481	1,120,599	1,219,188	1,376,162	1,413,758	1,479,247
외국인근로자	588,944	520,906	538,587	608,116	541,673	495,792
결혼이민자	144,214	147,591	149,764	147,382	159,501	160,653
유학생	87,221	83,484	80,570	84,329	95,963	117,127
외국국적동포	135,020	187,616	233,265	286,414	235,926	276,750
기타외국인	162,082	181,002	217,002	249,921	380,695	428,925
한국국적취득자(B)	123,513	133,704	146,078	158,064	159,447	169,535
외국인주민자녀(C)	168,583	191,328	204,204	207,693	191,459	212,302
외국인주민 (D=A+B+C)	1,409,577	1,445,631	1,569,470	1,741,919	1,764,664	1,861,084
주민등록인구(E)	50,734,284	50,948,272	51,141,463	51,327,916	51,269,554	51,422,507
D/E×100(%)	2.78%	2.84%	3.07%	3.39%	3.44%	3.62%

주: 2015년까지는 1월 1일 기준, 2016년, 2017년은 11월 1일 기준임

자료: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검색일자: 2019. 6. 24.

다.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 ☐ (민원역량) 민원서비스의 품질개선은 법률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서비스로서 의미를 가짐
 - 일반적으로 비용문제에 대한 사전적 부담으로 법원의 안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발성 민원뿐만 아니라,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당사자가 지속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 이제는 민원서비스의 제공 확대보다 서비스의 품질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원상담위원 활용, 민원서비스 조직인력에 대한 정기적 교육 훈련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 2019년 수원법원에 사법접근센터를 개설하는 등 새로운 시도가 관찰되고 있으며, 법률조언기능 이외에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전자화) 법원의 민원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소송기록의 열람이며, 전자소송이 확대되면서 사건기록의 전자화에 대한 법원 내외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전자소송 비율이 약 70%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기록의 전면 전자화의 필요성 제기
 - 종이독촉사건, 민사사건의 전면 전자화를 추진하여 전자소송 비율 확대를 견인하고, 소송자료 검토, 열람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과정의 효율성 강화
 -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동시 자료열람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 단축하는 효과

〈표 III-15〉 전자소송 시행 경과

구분	특허	민사	가사·행정	보전처분	회생·파산	시·군 법원	민사집행·비송
시행 시기	2010.4.	2011.5.	2013.1.	2013.9.	2014.4.	2015.1.	2015.3.

주: 형사사건 제외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 가능
 자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소송이란」, <https://ecfs.scourt.go.kr/ecf/ecf400/ECF410.jsp>, 검색일자: 2019. 6. 24.

- 민사뿐만 아니라, 가사 행정사건 등에서 전자소송 접수건수가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면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6〉 연도별 전자소송 접수건수

(단위: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민사	4,403,094	4,632,429	4,610,899	4,445,269	4,735,443	4,826,944	4,750,505
가사	141,179	143,874	152,265	159,620	160,634	161,285	168,885
행정	37,584	38,502	40,124	42,521	46,703	49,777	47,932
민사신청 및 항고	855,981	850,766	804,477	827,929	867,356	862,957	811,595
집행	771,912	838,922	825,800	819,079	897,365	962,104	1,064,189
형사	1,619,141	1,656,961	1,582,373	1,577,686	1,644,804	1,546,597	1,455,735

주: 본안사건과 본안의사건의 전심급 사건 수입
 자료: 대법원 내부자료, 「전자소송 - 사건 접수건수」

- 전자소송이 도입된 이후 전체적으로 전자소송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자법원, 전자소송에 대한 중장기적인 실행전략과 사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 발굴 노력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음

〈표 III-17〉 연도별 전자소송 비율(본안사건 제1심 기준)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37.4	43.0	45.5	38.1	46.2	53.4	61.9
특허	99.7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민사	37.3	43.5	53.7	60.8	65.9	71.9	77.2
가사		14.0	31.9	46.9	57.0	63.7	70.9
행정		92.9	99.8	99.0	99.9	99.9	100.0
도산			2.7	6.6	13.1	21.9	77.0
집행				16.5	29.7	37.8	

주: 특허본안은 2010.4, 민사본안은 2011.5.2, 가사본안 행정본안은 2013.1.21, 도산은 2014.4.28 민사집행은 2015.3.23부터 전자소송이 시행됨
 자료: 대법원 내부자료, 「전자소송 - 연도별 전자소송 비율」

□ 전자소송을 위한 소송자료 및 관련문건의 스캔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8〉 연도별 · 전자소송 유형별 스캔물량 추이

(단위: 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특허	118,337	67,067	59,297	36,649	20,180	28,419	18,994
민사	5,088,639	8,029,800	11,303,674	14,223,844	14,512,781	14,426,256	14,522,569
가사·행정		1,619,055	2,980,737	3,056,298	3,302,025	3,418,516	3,771,797
민사신청		332,676	859,519	2,394,274	2,903,837	2,943,404	2,714,405
항고 등				457,799	561,032	618,941	697,534
도산			1,036,164	2,181,824	2,779,866	2,742,507	10,529,052
집행·비송				3,365,141	5,244,000	5,886,190	6,978,970
합계	5,206,976	10,048,598	16,239,391	25,715,829	29,323,721	30,064,233	39,233,321
스캔업무 지원 대상법원 (35개)		5,543,751	10,801,723	10,883,922	24,842,174	25,261,464	31,192,763

자료: 대법원 내부자료, 「전자소송 - 연도별 스캔물량 추이」

〈표 III-19〉 연도별 전자소송 스캔물량 증가율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93.0	61.6	58.4	14.0	2.5	30.5
스캔업무 지원 대상법원(35개)		94.8	0.8	128.2	1.7	23.5

자료: 대법원 내부자료, 「전자소송 - 연도별 스캔물량 추이」을 참고하여 표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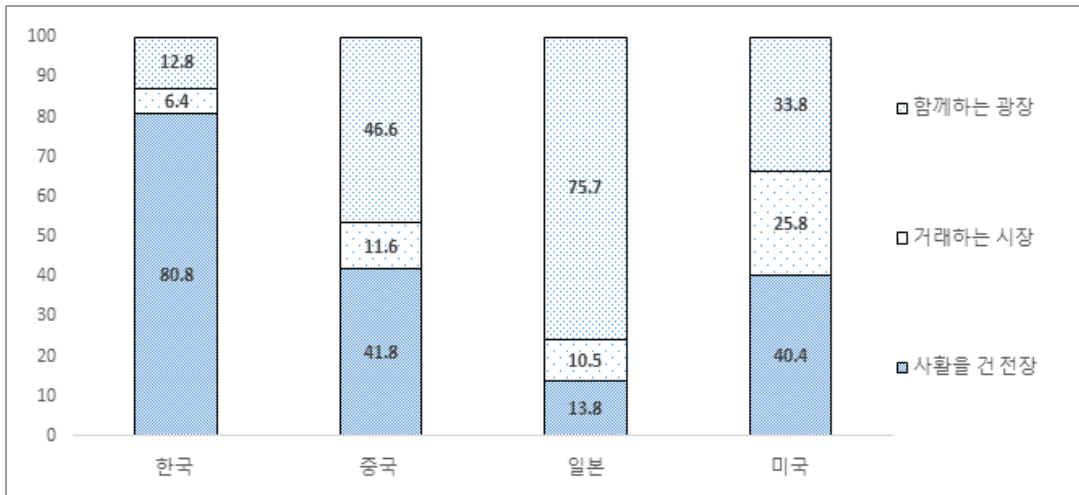
- 사건기록의 전자화 및 전자소송은 법원의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관계자 및 당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강화할 수도 있음
- (민원시설개선) 사법서비스의 대국민 접점에 있는 민원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해 서비스 품질제고 방안을 모색
 -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민원인 대기 공간 및 민원업무 공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관찰되고 있음
 - 사법시설의 경우, 민원의 성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민원의 기밀성 유지도 민원서비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개인별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분리 및 구분하고, 민원직원과 민원인의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음차단 및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도 민원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민원시스템 다양화) 민원인에 따라 민원상담직원과 상담을 시도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민원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 IT를 접목한 시스템 활용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음
 - 당사자의 사건과 관련된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법률구조의 지원내용 확인 등을 위해 터치스크린 방식의 민원시스템을 확산하는 방안을 고려
 - 터치스크린 시스템 활용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사전적으로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수준을 제고할 수 있음
 - 법원의 재판사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추구할 수 있음

- 외국어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민원시스템을 활용하는 수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적 확장성을 가지고 있음

라. 도서관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 (도서관 공공프로그램) 또한 일반국민들의 사법제도 및 환경, 법문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대응하고 있는바, 법원 도서관의 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법원도서관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 법률자료 확보 및 전자도서관 기능 강화
 - 법률교육 제공,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법원 및 법원 도서관과 연계하여 교육 및 세미나, 캠프 등을 실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 부여
- (도서관 공공프로그램) 최근 연구결과(김희삼, 2017)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학교교육이 바람직한 사회적 자본(ex, 신뢰, 협동심, 공공심, 준법정신 등) 축적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함께하는 광장’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활을 건 전장’ 이미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반적으로 공동체의식 및 사회규범의 준수를 강조하는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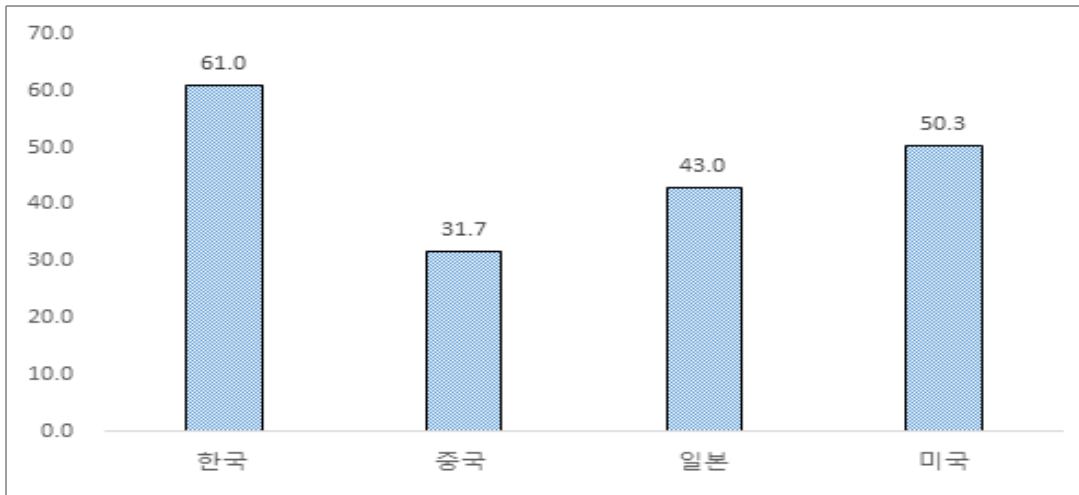
[그림 Ⅲ-11] 한·중·일·미 4개국 고교 이미지 비교



주: 함께하는 광장: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상호 이해와 조화 및 협동심을 체득하는 곳
 거래하는 시장: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지식과 돈의 교환이 일어나는 곳
 사활을 건 전장: 좋은 대학을 목표로 높은 등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곳
 출처: 김희삼(2017),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p. 66.

- ‘자국 국민들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법이나 규칙 등 사회적 규범을 위반할 사람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느냐(위반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가정)’라는 질문에 한국 대학생은 평균 61%가 위반할 것으로 생각하여, 미국(50.3%), 일본(43.0%), 중국(31.7%)에 비해 준법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4개국 가운데 사익을 위해서라면 법규를 위반할 사람들이 많다는 인식도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국민들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수준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을 보여줌

[그림 Ⅲ-12] 사익을 위해 법규를 위반할 국민의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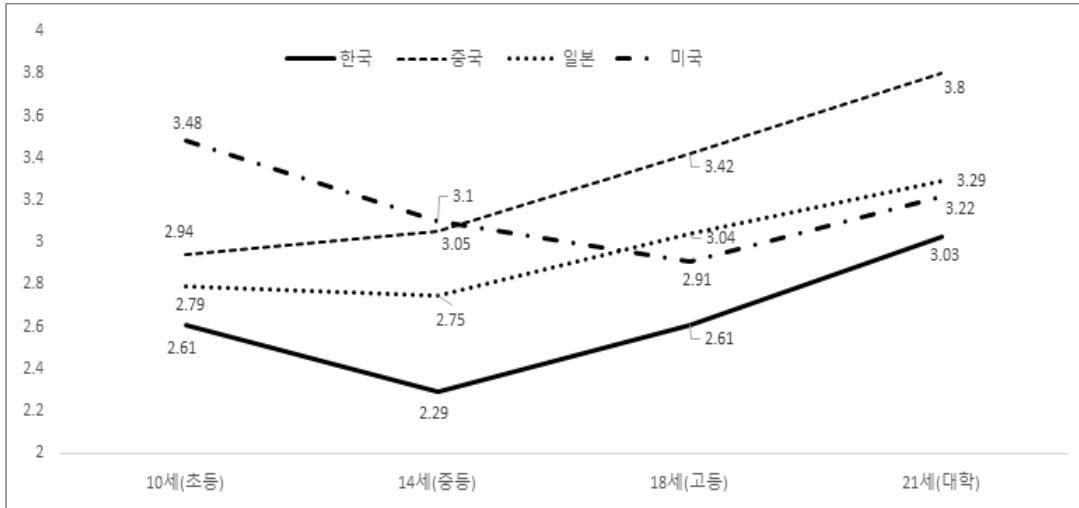
출처: 김희삼(2017),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p. 88.

- ‘자국 학생들의 연령대별 준법정신은 평균적으로 어느 수준이냐’라는 질문에 한국 대학생의 인식수준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초등학교 때에 비해 중학교 때 더 낮아졌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초등학교 때 수준으로 회복하고, 대학교에서 더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관찰됨
 - 대부분 국가에서 대학교에서 준법정신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상기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시기 동안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강화를 위한 공동체 및 준법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청소년들이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초등학교 졸업 이후, 중학교 재학연령대에서 청소년 보호처분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도 준법의식 수준의 연령대별 변화와 연계하여 고려할 필요

[그림 Ⅲ-13] 교육단계별 학생의 준법정신에 대한 인식

(단위: 5점 척도)



출처: 김희삼(2017),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p. 116.

- 법원도서관은 법률전문서적자료 및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1차적인 기본기능 이외에 법원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및 육성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현재 활용이 저조한 도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도서관 내 학생참여 모의재판, 준법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방학 중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
- 초중고생뿐만 아니라, 등록외국인, 다문화가정 및 자녀,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회화 교육 등을 주관할 담당주체로서 법원도서관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일반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외국인 및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법서비스는 대부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도 지원 및 보호를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음
 - 이들에 대한 법률교육은 사전적·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향후 적극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현재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정형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법률서

비스 및 교육은 품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법원도서관과 같은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기능을 구조·정형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서전문 교육훈련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사서교육훈련)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직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사서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훈련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교 및 각종 학교 소속 사서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체 자료실 소속 직원, 초·중·고교 사서교사, 작은도서관 직원 등
 - (교육훈련 평가관리) 연구실적 평가(개인별, 분임별), 실기·실습 평가, 근태 평가를 통해 관리
 - (교육훈련 편성)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모바일교육 등 총 97과정 105회(2018년도 기준) 교육훈련이 편성되어 있으며, 집합교육의 경우 3월부터 11월, 사이버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짐
 - (수강 절차)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 선발요청 공문을 발송하면 해당 기관이 명단을 작성하여 신청
 - (교육비) 유료교육비 1일 30,000원
-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혹은 공공도서관 범주에 속하는 도서관들이 회원으로 있는 사단법인 공공도서관협의회를 통한 교류와 협업을 생각해 볼 수 있음¹⁸⁾
 - 공공도서관협의회는 도서관 상호간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도서관 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 발전, 도서관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임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이 회장이며, 국립세종도서관 포함 751개 공공도서관이 회원으로 있음

18) 공공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pla.kr/index.htm>)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2019. 7. 9.

- 주요 사업은 공공도서관 협력 워크숍 개최, 연구논문 발간, 해외도서관 연수,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가 추진, 시·도지부 활동지원임
 - (워크숍) 매년 3월, 공공도서관 우수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업무 협력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공공도서관 협력 워크숍을 개최
 - (해외 연수) 해외도서관 현장연수를 통해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서비스에 관한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현장에 반영¹⁹⁾
 - 해외 연수 내용은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및 운영 시스템, 각국 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현황, 지역별·도서관별 도서관 협력 사업(상호대차 등), 도서관 및 관련 문화기관 시설 견학 등으로 구성
 - 2018년에는 25명의 인원이 독일의 뮌헨 시립도서관,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마인츠대학도서관, 라이프치히 독일 국립도서관 및 음악 아카이브, 베를린 주립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을 1주일간 견학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²⁰⁾
 -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공공도서관협의회는 2017년부터 세계도서관정보대회(IFLA)에 가입하여 자체적으로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를 추진하고 있음
 -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에서 매년 8월 개최하는 세계도서관계의 최대 국제회의로서, 150개국 도서관계 인사 3,000여명이 참석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공공도서관협의회 시스템을 벤치마크하여 각급 법원 도서관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워크숍 개최, 해외 연수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능 다변화 및 홍보 강화) 법원도서관의 기능은 1차적으로 도서 및 정보 구축뿐만 아니라, 교육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법사회화와 관련된 역사축적의 공간, 박물관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수도 있음
 - 기능 다변화와 함께 홍보 강화를 통해 전통적 기능과 함께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으로서 법원도서관의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19) 연수비용의 50%를 협의회에서 지원. 주요 연수내용은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및 운영 시스템, 각국 도서관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현황, 지역별·도서관별 도서관 협력 사업(상호 대차 등), 도서관 및 관련 문화기관 시설 견학이며, 해외 연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20) 공공도서관협의회(2018), 「2018년 해외 선진도서관 연수보고서 - 독일-」, p. 1.

- (국립 중앙도서관 운영사례) 도서 관련 교육뿐 아니라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영상 제작, 통계 패키지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교육 콘텐츠는 일정 기간을 두고 변경되며, 매월 교육 일정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됨
 - 2019년 7월 기준, 16세 이상의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우리국토의 재발견’, ‘북트레일러 제작 교육’, ‘논문 작성을 위한 통계 패키지(R)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국토의 재발견) 국토연구원과의 협력 사업으로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 관련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을 실시(80명)
 - (북트레일러 제작 교육) 도서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작되는 디지털 영상(북트레일러) 제작을 도와주는 교육을 실시(30명)
 - (논문 작성을 위한 R 교육) 논문 작성자들을 위한 통계 패키지 교육을 실시(50명)
- (전시·상영) 정기적으로 고문헌 및 고대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주 1~2회 영화를 상영하고 있음
 - 주로 고문헌과 고대 자료가 전시되는 편이나, 개인의 기증 자료, 디지털 자료, 웹툰 등이 전시되기도 함
 - 영화는 일반영화뿐 아니라 독립예술영화도 상영되며, 때때로 영화감독이나 영화 평론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상영되기도 함
- (강연·학술행사) 전문가 및 유명 인사의 강연, 학술행사를 수시로 개최
 - 최근 행해진 강연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이야기(6월)’, ‘잊혀진 조선명필을 만나다(5월)’이 있으며, 학술행사로는 ‘홍길동전 관련 고문헌 춘계공동학술대회(5월)’가 있음
- (취약계층) ‘인문열차, 삶을 달리다’와 같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행사도 개최
 -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코레일과 공동 주최하는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으로서, 관광열차를 이용하여 참여자가 강연 인사와 함께 각 탐방 주제와 연관 있는 주변을 여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짐²¹⁾

21)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9. 7. 9. <http://www.nl.go.kr/tour/c1/intro.jsp>

[그림 III-14] 국립중앙도서관 상영, 전시 일정(2019년 7월)

7월의 영화: 디지털도서관 소회의실 지하2층, 14:00				
첫째주	7월 2일 화요일	파리넬리	7월 4일 목요일	마이 플레이스
둘째주	7월 9일 화요일	비온드 사일런스	7월 11일 목요일	델타 보이즈
셋째주	7월 16일 화요일	프리다	7월 18일 목요일	강변호텔
넷째주	7월 23일 화요일	빅아이즈		
다섯째주	7월 30일 화요일	프랑코포니아		

7월의 전시	
▲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 2019년 8월 25일 일요일	민속음악 연구의 개척자 이보형 기증자료전 장소 국립세종도서관, 본관 1층 전시실/ 문의 044. 900. 9205
■ 2019년 5월 8일 수요일 ~ 2019년 8월 25일 일요일	고문헌 상설 전시 : 고문헌, 한 권의 책도 소중한답니다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5층 고문헌 전시실/ 문의 02. 590. 0505
●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 2019년 8월 25일 일요일	만화소설과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러시아 장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층 전시실 / 문의 02. 3413. 4753
■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	상설 전시, 시간의 기록을 잇다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본관2층 문화마루 / 문의 02. 590. 0586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9. 7. 9., http://www.nl.go.kr/nl/commu/libnews/notice_view.jsp?board_no=10145&site_code=nl¬ice_type_code=1¤tPage=0&srch=&searchWord=&cate_no=7

[그림 III-15] 국립중앙도서관 행사 일정(2019년 7월)

<div> <div>■ 국립중앙도서관</div> <div>● 국립장애인도서관</div> <div>●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div> <div>▲ 국립세종도서관</div> </div>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div>■</div> 우리 국토의 재발견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지하3층 14:00	<div>●</div> 청각장애인 독서지도 강사 교육 디지털도서관 소회의실, 지하2층 10:00	<div>●</div> 청각장애인 독서지도 강사 교육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지하3층 10:00
7	8	9	10	11	12	13
	<div>■ ● ● ● ▲</div> 경기 휴관일	<div>■</div> 북트레일러 제작 교육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지하3층 14:00	<div>■</div> 북트레일러 제작 교육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지하3층 14:00	<div>■</div> 우리 국토의 재발견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지하3층 14:00		<div>■</div> 인문열차, 삶을 달린다 현장탐방 울산 당일
14	15	16	17	18	19	20
		<div>■</div> 북트레일러 제작 교육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지하3층 14:00	<div>■</div> 북트레일러 제작 교육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지하3층 14:00	<div>■</div> 우리 국토의 재발견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지하3층 14:00	<div>●</div> 청각장애인 독서지도 강사 교육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지하3층 10:00	<div>●</div> 청각장애인 독서지도 강사 교육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지하3층 10:00
21	22	23	24	25	26	27
	<div>■ ● ● ● ▲</div> 경기 휴관일	<div>■</div> 북트레일러 제작 교육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지하3층 14:00	<div>▲</div> 여름 독서교실 역사는 흐른다 소회의실, 3층 10:00 <div>■</div> 북트레일러 제작 교육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지하3층 14:00	<div>▲</div> 여름 독서교실 역사는 흐른다 소회의실, 3층 10:00 <div>■</div> 우리 국토의 재발견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지하3층 14:00	<div>▲</div> 여름 독서교실 역사는 흐른다 소회의실, 3층 10:00	
28	29	30	31	<div> <div>●</div> 부모를 위한 독서문화 강좌 성동구청 소회의실, 6층 10:00 <div>▲</div> 도서관 속 과학강의 대회의실, 3층 19:00 </div>		
	<div>■</div> 논문작성을 위한 R 통계분석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지하3층 10:00	<div>■</div> 논문작성을 위한 R 통계분석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지하3층 10:00 <div>▲</div> 해설이 있는 인문학 대회의실, 3층 19:00	<div>■</div> 논문작성을 위한 R 통계분석 디지털도서관 소회의실, 3층 10:0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9. 7. 9, http://www.nl.go.kr/nl/commu/libnews/notice_view.jsp?board_no=10145&site_code=nl¬ice_type_code=1¤tPage=0&srch=&searchWord=&cate_no=7

- (국회도서관 운영사례) 국립중앙도서관에 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공개토론회, 강연 및 학술세미나, 각종 공연 등을 수시로 개최
 - (토론회) 5월, 주한프랑스대사관/프랑스 문화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개인 정보보호’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음(동시통역 제공)
 - (학술세미나) 4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적 가치’를 개최한 바 있음
 - ‘(공연) 음악 공연 행사 개최(2018년 코리아음악예술단 정기공연)

마. 사법서비스 분야별 매뉴얼 개선

- 사법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사회취약계층에게 소송구조나 다른 방식으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과 청소년들의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는 회복적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문교육을 받거나 자격시험을 거친 변호사들의 소송구조를 지원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외의 사법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품질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보호·감독하는 보호위원들의 전문성도 위원별로 매우 큰 격차가 있으며, 조정위원들도 활동분야에 따라 상이함
 - 성년후견의 경우에도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년후견·감독인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상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에 대한 활동매뉴얼, 역할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이에 기초한 정기적인 보수교육 등을 제공하여야 함
 - 단순한 교육비 지원이 아닌 교육제공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성과관리를 통해 사법서비스의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
- 교육제공자의 담당기능 수행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침 개발 및 개선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는 접근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음

바. 사법서비스 직무역량 및 홍보역량 강화

-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법서비스는 민원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으며, 민원서비스의 활성화는 ① 서비스 형태를 개선하는 방안, ② 서비스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형태를 개선하는 방식은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 경제적 약자, 외국인 등의 특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방식, 전달체계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사법서비스가 가능한 영역에서 일반적인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사법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서비스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민원서비스를 포함하여 사법서비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법원구성원들의 교육훈련체계를 고도화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 및 성과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IV. 해외사례

1. 주요국의 조정제도

- (의의) 조정은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조정인(mediator)으로 불리는 제3자를 이용하는 절차²²⁾로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한 방식임
 - 본 절에서는 주요국의 조정제도 현황과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가. 미국

- 미국의 대체적 분쟁 해결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88)은 연방 지방법원에서의 대체적 분쟁 해결을 의무화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규율하도록 하고 있음
 - 절차 진행자의 선발이나 선정, 비밀의 보호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연방지방법원에서 법원의 사정에 맞게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²³⁾
 - 일선 연방지방법원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체적 분쟁 해결의 구체적인 형태나 방식이 연방지방법원마다 다름

1) 연방지방법원 수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²⁴⁾

-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1978년 최초로 법원 부속형 중재 프로그램을 시행한 3곳의 연방지방법원 중 하나로, 대체적 분쟁 해결 멀티옵션 프로그램(ADR Multi-option Program)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멀티옵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은 비구속적 중재(non-binding arbitration), 조기 중립 평가(early neutral evaluation), 조정(mediation), 화해 회합(settlement conference), 민간 분야 대체적 분쟁 해결 등 5가지이며, 조정은 그 중 하나의 선택 가능한 절차임

22)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201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p. 53.

23) 상계서(2016), p. 103.

24) 상계서(2016), pp. 112~126을 참고하여 작성

- 사건이 멀티옵션 프로그램에 배정되면 당사자들은 법원에서 정한 기한까지 어떤 내용의 절차를 이용할지 협의

- (조정 절차) 사건이 회부되면, 대체적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전에 마련된 조정인(mediator) 중에서 사건에 적절한 사람을 선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줌²⁵⁾
 - 조정인은 전화 회합(pre-session phone conference)을 통해 당사자와 조정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사건의 내용, 당사자가 희망하는 조정의 내용, 출석할 사람 등을 협의
 - 당사자는 조정기일 7일 전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정인과 상대방에게 제출
 - 의견서에는 대리인 외 조정기일 출석에 관한 사항, 주장과 입증의 요약,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적·사실적 쟁점과 자료, 그동안의 협의 과정과 내용 등을 기입
 - 조정기일에 대리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당사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조정인은 사건 당사자를 분리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와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제외하고 당사자와만 협의를 할 수도 있음
 - 분리 진행할 경우에 조정인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분리 진행 때 했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 없음
 - 조정인 절차 종료 후 14일 이내에 법원에서 마련한 양식에 맞추어 조정 일시, 조정 성립 여부, 후속 절차 예정 여부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함
- (조정인 보수) 조정인은 조정 준비를 위한 시간(최대 2시간)과 조정기일의 첫 4시간은 무료로 봉사하며, 첫 4시간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짐²⁶⁾
 - 조정인은 4시간 이후에도 원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무료로 봉사할 수 있음
 - 만약 조정인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 당사자는 절차를 종료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계속 진행할 경우 조정인에게 정기적인 시간당 요율²⁷⁾ (혹은 합의된 요율)을 지급

25) 상계서(2016), pp. 119~120.

26)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홈페이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Handbook-Mediation", https://www.cand.uscourts.gov/adr/adr-handbook#_Toc512864605, 검색일자: 2019. 6. 18.

27) 상계서(2016)에 따르면 시간당 300달러를 지급

- 보수는 당사자가 조정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일반적으로는 쌍방이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지만 약정에 의해 비율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일반적으로 비용 및 청구는 조정 전 전화 회합에서 논의됨
-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사건일지라도 조정인의 보수는 당사자가 부담

□ 멀티옵션 프로그램 실적과 조정 절차 시행 실적

- 멀티옵션 프로그램의 5가지 옵션 중 조정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절차로 전체 회부된 사건의 40% 이상을 차지함
 - 2013년 기준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성립한 사건은 68%에 달함²⁸⁾
 - 또한 조정 절차와 조기 중립 평가에 참가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0% 이상의 당사자들이 절차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절차 참가로 인한 이익이 비용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²⁹⁾

〈표 IV-1〉 2005~2013년 멀티옵션 프로그램 시행 실적과 조정 절차 시행 실적

(단위: 건,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사건	3,350	4,451	3,765	3,482	4,020	4,016	4,609	4,757	4,370
회부된사건	1,469	1,494	1,532	1,537	1,698	1,760	1,891	1,807	1,746
조정	494	566	630	661	784	750	776	766	756
	(33.6)	(37.9)	(41.1)	(43.0)	(46.2)	(42.6)	(41.0)	(42.4)	(43.3)

주: 괄호 안 수치는 멀티옵션 프로그램에 회부된 전체 사건 대비 조정 절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201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p. 125의 표를 일부 발췌하여 재작성.

2) 주법원 수준: 캘리포니아 주법원³⁰⁾

-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조기조정 시범 프로그램(Early Mediation Pilot Program)’을 시행한 바 있음
 - 1999년 7월 5곳의 법원³¹⁾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정인을 선정하여 2000년 1월 1일 이후 접수되는 민사사건에 대하여 조기조정을 시행하였음

28) 상계서(2016), p. 126.

29) 상계서(2016), p. 126.

30) 상계서(2016), pp.126~131.을 참고하여 작성

31) 프레즈노 법원, 샌디에이고 법원, 콘트라코스타 법원, 소노마 법원, 로스앤젤레스 법원. 단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2000년에 추가된 법원임

-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조기조정 시범 프로그램은 변론 전 시도한 조정의 성공 비율을 확인하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조정 회부와 당사자 동의에 의한 조정 회부 결과를 비교³²⁾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운영절차) 법원은 조기조정 대상이 되는 사건들을 선별하여 소 제기로부터 90~150일 이내에 조기조정 일정 회합(early mediation status conference)을 열어 당사자에게 조정을 소개하고 조정인 명단을 제공³³⁾
 -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인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진행
 - 법원은 미리 조정인을 선정하여야 하나, 조기조정 일정 회합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는 다른 사람을 조정인으로 선정할 수 있음
 -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조정인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선정한 조정인이 절차를 진행함
 - 조정인은 조정 절차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합의 성립 여부를 법원에 보고
 -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당사자 일방에서 조정을 그만두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
- (조정인 보수) 법원에서 마련한 조정인 명단에 속하는 조정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수를 지급하며, 명단 외 인물로 당사자가 조정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평하게 조정인 보수를 부담
- 조기조정 시범 프로그램 시행 실적(2000년~2001년)³⁴⁾
 - 총 23,732건의 조정 대상 사건 중 38.5%에 해당하는 9,166건의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되었으며, 그 중 실제로 조정이 진행된 사건은 6,320건임
 - 조정이 진행된 사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비율인 조정성립률은 50.9%로서, 심리 없이 소송 초기에 시도된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조정성립률을 기록하였음
 -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회부된 사건의 조정성립률(56.2%)이 법원 직권에 의해 회부된 사건의 조정성립률(48.9%)에 비해 높았음

32) 프레즈노,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법원은 직권에 의한 조정 회부 프로그램을, 콘트라코스타, 소노마 법원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조정 회부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상게서(2016), pp. 127~128.)

33) 상게서(2016), p. 128.

34) 상게서(2016), pp. 129~130.

〈표 IV-2〉 2000~2001년 일반민사사건 조정 회부, 조정 성립 현황

(단위: 건, %)

구분		조정대상 사건	조정 회부		조정 진행		
조정회부 형태	주법원		사건	회부율	사건	조정 성립	조정 성립률
법원 직권 (mandatory)	샌디에이고	11,396	5,395	47.3	3,676	1,861	50.6
	로스앤젤레스	1,358	560	41.2	399	140	35.1
	프레즈노	3,707	871	23.5	514	241	46.9
	소 계	16,461	6,826	41.5	4,589	2,242	48.9
당사자 동의 (voluntary)	콘트라코스타	4,820	1,650	34.2	1,157	617	53.3
	소노마	2,511	691	27.5	574	356	62.0
	소 계	7,331	2,341	31.9	1,731	973	56.2
합 계		23,792	9,166	38.5	6,320	3,215	50.9

자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201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p. 129.

- 또한 조기조정은 변론으로 가는 사건의 비율, 사건의 처리 기간, 소송비용, 법원 업무량을 상당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으며, 당사자의 만족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³⁵⁾

나. 독일

- 독일은 2012년 조정에 관한 단일법인 「조정법」을 제정하여 조정을 명시적으로 법 제화하였음
- 조정(Mediation)을 당사자들이 하나 또는 다수의 조정인들의 도움을 받아 임의로 그리고 자기 책임하에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조정인(Mediator)을 재판 권한이 없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서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을 도와주는 자로 정의하였음³⁶⁾
 - 독일 조정법은 조정의 개념뿐 아니라 조정인에 대한 교육, 자격 부여 등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임
 - 독일 「조정법」은 분쟁의 형태나 당사자 거주지에 관계없이 독일 내 모든 조정에 적용됨

35) 상계서(2016), p. 131.

36) 상계서(2016), p. 168.

-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여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선입토록 함
 - 조정인은 당사자가 조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조정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⁷⁾
 - 이는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후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임
 - 또한 당사자들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음
- (독립성과 중립성) 조정인은 당사자들에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모든 사정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조정 절차를 진행³⁸⁾
 - 조정 절차 전 조정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일방의 당사자를 위해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조정인은 조정 절차 종료 후에도 조정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일방의 당사자를 위해 활동할 수 없도록 함
 -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정인은 사건과 관련된 전문적 배경, 교육 내용, 경력 등을 제공하여야 함
- (비밀 보호) 조정인과 조정 절차에 참여한 사람은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실 관련,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여받음
- (교육 및 자격) 조정인은 적절한 교육과 규칙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이론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추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조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³⁹⁾

다. 프랑스

- 프랑스는 조정을 분쟁 당사자들에 의하여 공평, 능력, 성실함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선정된 제3자의 조력을 받아,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로 하여금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⁴⁰⁾

37) 상계서(2016), pp. 168~169.

38) 상계서(2016), p. 169.

39) 함영주(2017), 「민·상사 사건의 소송대체분쟁해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조정절차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0호, p. 12.

40) 상계서(2017), p. 13.

- 조정인은 자연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조정인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법률로 정함
-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는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에게 조정 절차 이용을 제안할 수 있음⁴¹⁾
 -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할 경우에는 양쪽 당사자의 동의를 명시하는 한편 조정인과 조정 기간, 조정인의 보수에 관한 예납금과 예납금을 지급할 당사자를 지정토록 함
 - 지정된 당사자가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정 회부 결정은 실효되고 다시 소송 절차가 진행됨
 - 조정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조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 가능⁴²⁾
- (조정 절차) 조정인은 원칙적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은 없으나,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3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음⁴³⁾
 - 한쪽 당사자 또는 조정인의 요청에 의해 판사는 언제든지 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음
 - 조정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이나 진술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소송 절차에 제출될 수 없음
 - 절차 종료 후 조정인의 보수는 판사가 정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부족한 보수를 추가 지급하거나, 초과지급분을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단, 조정인의 보수가 법정화된 것은 아니어서 판사는 개별 사건마다 조정인의 적정한 보수를 정하게 됨
- (CMAP) 법원의 회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정 절차 또는 소송 외의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조정인으로 파리 조정·중재센터(CMAP)가 널리 알려져 있음
 - 1995년 파리 상공회의소에서 1901년 법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분쟁 해결 관련 센터 중 선두 주자로서 공인된 교육기관이기도 함⁴⁴⁾
 - 조정인으로는 변호사나 퇴직 판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 관계자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같은 비법조인도 활동⁴⁵⁾

41) 전게서(2016), p. 207.

42) 상게서(2016), p. 208.

43) 상게서(2016), pp. 208~209.

44) 파리 조정·중재센터 홈페이지, <http://www.cmap.fr/>, 검색일자: 2019. 6.27.

- 조정비용은 법원 연계형 조정(법원의 회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정)의 경우 시간당 300유로(2015년 말 기준)로 단일하나, 약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정(소송 외적인 조정 절차)은 사건의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요율을 적용함⁴⁵⁾
 - 법원 연계형 조정은 약정에 비해 접수비나 선불금이 없으며 시간당 요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법원 연계형 조정 비용은 약정에 의한 조정의 선불금 개념과 마찬가지로 조정이 시작되자마자 지급하여야 하며, 일단 조정이 시작되면 환불되지 아니함

〈표 IV-3〉 CMAP 조정 관련 비용

구분	사건	비용
약정에 의한 조정 (Contractual Mediation)	30,000유로 이하 사건	접수비: 250유로 고정비용: 750유로(최대 5시간)
	30,000유로 초과 150,000유로 이하 사건	접수비: 500유로 진행비: 시간당 300유로 선불금: 3,000유로
	150,000유로 초과 1,000,000유로 이하 사건	접수비: 500유로 진행비: 시간당 350유로 선불금: 3,500유로
	1,000,000유로 초과 3,000,000유로 이하 사건	접수비: 500유로 진행비: 시간당 400유로 선불금: 4,000유로
	3,000,000유로 초과 사건	접수비: 500유로 진행비: 시간당 500유로 선불금: 5,000유로
법원 연계형 조정 (Court-annexed Mediation)		시간당 300유로

주: 2015년 12월 31일 기준. 2019년 6월 27일 기준 1유로=1,315원 정도이므로, 법원 연계형 조정의 시간당 요율은 한화 기준 약 40만원 정도임
 자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201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p. 212.

라. 일본

- ☐ 일본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민사조정에 관한 기본법으로 「민사조정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특정채무 등의 조정 촉진을 위한 특정조정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음

45) 상계서(2016), p. 211.

46) 상계서(2016), p. 211.

- 한국의 「민사조정법」과 많은 면에서 유사하나, 관할 법원, 조정기관 등 제도운영상 일부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관할 지역에 따라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군법원이 조정신청사건을 담당하나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전국 438곳⁴⁷⁾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재판소(簡易裁判所)에서 담당함⁴⁸⁾
 - 단,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사건과 지방재판소에서 조정에 회부한 사건 그리고 농사조정·광해조정 등 특정 유형의 조정사건은 지방재판소에서 관할함
 - 조정은 조정주임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의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판관만에 의한 조정도 가능함
 -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계속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당사자 협의 없이 수소재판소에서 조정에 회부할 수 없음⁴⁹⁾
- (민사조정관 제도) 일본은 민사조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민사조정관 제도는 재판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인인 변호사가 조정주임이 됨으로써 당사자의 입장을 보다 반영하며, 조정관이 재판관일 경우 자주 발생하는 조정기일 불참 사태를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음⁵⁰⁾
 - 민사조정관은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최고재판소가 임명함⁵¹⁾
 -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비상근임
 - 민사조정관은 재판소가 지정하는 조정사건을 처리하며, 민사 조정 및 특정 조정에 대해 재판관 또는 재판소가 행하는 대부분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⁵²⁾
 - 민사조정관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며,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일당, 숙박료를 지급받음⁵³⁾

47) 일본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ourts.go.jp/about/sosiki/kakyusaibansyo/index.html#tihou>, 검색일자: 2019. 6. 27.

48) 상계서(2016), p. 217.

49) 상계서(2016), p. 219.

50) 상계서(2016), p. 219.

51) 일본 「민사조정법(民事調停法)」 제23조의2를 참고하여 작성.

52) 일본 「민사조정법(民事調停法)」 제23조의3을 참고하여 작성.

53) 일본 「민사조정법(民事調停法)」 제23조의4

□ (조정위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민사 분쟁의 해결에 유용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또는 사회생활상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인격과 식견이 높은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자 중 최고재판소가 지명함⁵⁴⁾

□ (민사조정 신청 수수료) 일본의 민사조정 신청 수수료는 소 제기 수수료의 40~50% 수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커짐에 따라 격차가 커지는 구조임

〈표 IV-4〉 일본 민사조정 신청 수수료

소송목적의 값	소 제기 수수료	민사조정 신청 수수료
100만엔 이하	10만엔마다 1,000엔씩 증가	10만엔마다 500엔씩 증가
100만엔 초과~ 500만엔 이하	20만엔마다 1,000엔씩 증가	20만엔마다 500엔씩 증가
50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50만엔마다 2,000엔씩 증가	50만엔마다 1,000엔씩 증가
1,000만엔 초과~ 10억엔 이하	100만엔마다 3,000엔씩 증가	100만엔마다 1,200엔씩 증가
10억엔 초과~ 50억엔 이하	500만엔마다 10,000엔씩 증가	500만엔마다 4,000엔씩 증가
50억엔 초과	1,000만엔마다 10,000엔씩 증가	1,000만엔마다 4,000엔씩 증가

자료: 일본 「민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제3조, 제4조 별표 제1의 1, 제1의 14
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law/detail_main?re=&vm=1&id=1938, 검색일자: 2019. 6. 27.

2. 해외 사법서비스 사례

가. 일본의 사법지원센터: 호테라스(法-テラス)

1) 개요

□ (의의) 일본의 사법지원센터는 2004년 제정된 일본의 「총합법률지원법(總合法律支援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음⁵⁵⁾

54) 상계서(2016), p. 219.

55) 한민경(2018), 「주요국의 형사공공변호제도 비교」, 김대근·한민경, 『공공변호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69.

- 「총합법률지원법」은 민사·형사를 모두 포함한 법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총합법률지원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포된 법률임
- 일본 사법지원센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독립행정법인으로서 법률구조를 담당하는 핵심기관임⁵⁶⁾
 - 일본 사법지원센터 명칭인 ‘法-テラス(법테라스)’에서 ‘테라스’는 법률문제를 지닌 시민의 마음에 밝게 빛을 비추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인 테라스와 같은 장소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짐⁵⁷⁾

〈표 IV-5〉 사법지원센터 설치 근거: 「총합법률지원법(総合法律支援法)」 제2조

－ 총합법률지원법 －

제2조(기본이념)

총합법률지원 실시 및 체제 정비는 다음 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 형사를 가리지 않고 두루 전국에서 법 관련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総合法律支援の実施及び体制の整備は、次條から第7條までの規定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民事、刑事を問わず、あまねく全國において、法による紛争の解決に必要な情報やサービスの提供が受けられる社會を實現することを目指して行われるものとする。

출처: 일본사법지원센터(法-テラス) 홈페이지, https://www.houterasu.or.jp/houterasu_gaiyou/hourei_kitei/sougouhouritsusienho.html, 검색일자: 2019. 5. 2.

- (조직)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이사장,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는 4인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 상근 직원 수는 737명(직원 수는 2018년 3월 기준)⁵⁸⁾
 - 본부사무국장 이하 총무부, 제1사업부, 제2사업부 등 4개 부서 존재
 - 사법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상근변호사(常勤弁護士)와 계약변호사(契約弁護士),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⁵⁹⁾

56) 일본사법지원센터(法-テラス) 홈페이지, <https://www.houterasu.or.jp>, 접속일자: 2019.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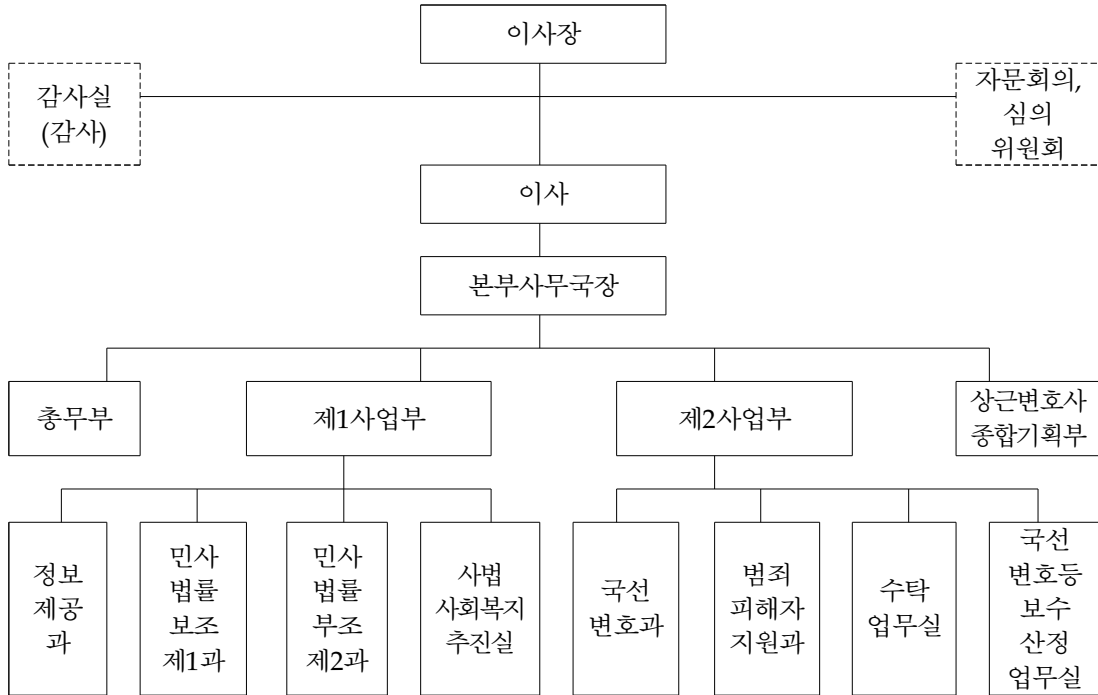
57) 한민경(2018), 「주요국의 형사공공변호제도 비교」, 김대근·한민경, 『공공변호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69.

58) 일본사법지원센터(法-テラス) 홈페이지, https://www.houterasu.or.jp/houterasu_gaiyou/organizations.html, 검색일자: 2019. 5. 2.

59) 한민경(2018), 전거서, p. 71.

- 상근변호사는 사법지원센터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변호사이며, 계약변호사는 개업변호사 중 사안별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여 변론활동을 수행하는 변호사임

〈표 IV-6〉 일본 사법지원센터 조직도



주: 본부조직 외에 지방사무소 50개소 존재

출처: 일본사법지원센터(法-テラス) 홈페이지 조직도를 참고하여 저자가 표로 작성
(홈페이지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18. 6. 28., 검색일자: 2019. 5. 2.)

- (업무) 「충합법률지원법」 제3조 내지 제7조는 사법지원센터가 하는 법률 지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주요 업무로 법률 정보 제공, 민사 법률 구조 업무, 사법 과소 대책(사법 접근성 강화) 업무,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 국선 변호 업무, 기타 수탁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 종합법률지원법 －

제3조(충실한 정보 제공, 정보 제공 강화)

재판 기타 법률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 및 인접 법률 전문직 등의 업무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裁判その他の法による紛争の解決のための制度を有効に利用するための情報等のほか、弁護士、隣接法律専門職者等の業務に關する情報等が提供される態勢の充實強化が図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제4조(민사 법률구조 사업의 정비 발전)

자력이 부족한 사람도 민사 재판 등의 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이 높은 민사 법률구조 사업의 적절한 정비 및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資力の乏しい者にも民事裁判等手續の利用をより容易にする民事法律扶助事業が公共性の高いものであることにかんがみ、その適切な整備及び發展が図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제5조(국선 변호인 선임)

국선 변호인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상황을 확보하여야 한다.

迅速かつ確實に國選弁護人の選任が行われる態勢の確保が図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제6조(범죄 피해자 등 지원)

범죄 피해자 등이 형사 절차에 적절하게 참여하고, 범죄 피해자 등이 입은 손해와 고통의 회복 또는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와 기타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犯罪被害者等が刑事手續に適切に關与するとともに、犯罪被害者等が受けた損害又は苦痛の回復又は輕減を図るための制度その他の犯罪被害者等の援助に關する制度を十分に利用することのできる態勢の充實が図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제7조(제휴 확보 강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본 변호사연합회, 인접 법률 전문직 단체,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 행위자, 범죄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단체, 노인 또는 장애인에 대한 원조를 실시하는 단체 등과의 연계 확보 및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國、地方公共団体、日本弁護士連合會、隣接法律専門職者団体、裁判外紛争解決手續を行う者、犯罪被害者等の援助を行う団体、高齢者又は障害者の援助を行う団体等の間における連携の確保及び強化が図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출처: 일본사법지원센터(法-テラス) 홈페이지, https://www.houterasu.or.jp/houterasu_gaiyou/hourei_kitei/sougouhouritsusienho.html, 검색일자: 2019. 5. 2.

2) 주요 업무⁶⁰⁾

- (법률 정보 제공) 법제도에 대한 정보 및 상담 기관·단체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
 - 상담 기관·단체로는 변호사회, 사법서사(司法書士)회, 지방공공단체의 상담 창구 등 존재
 -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여 훈련받은 운영자가 이용자의 문의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
 - 면담을 희망할 경우 전국에 설치된 지방사무소 방문을 안내하고 상담을 진행
- (민사 법률구조) 경제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상담을 실시하거나, 변호사·법무사 비용을 지원하고 서류 작성을 도움
 - 일본 국민뿐 아니라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대상자가 됨(법인이나 조합 등의 단체는 대상자가 되지 않음)
 - 개인 파산 사건, 이혼 등 가사사건 취급
 -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법지원센터까지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출장 상담도 실시하고 있음
- (사법 접근성 강화) 가까운 곳에 법률가가 없어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법 과소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사무소’ 등을 설치·운영
 - 지역 사무소는 사법접근센터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상주(2016년 3월 기준 약 250명)
 - 상근변호사는 민사 법률 구조, 국선 변호 외에도 일반 개업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유료로 법률 상담 사건을 수임하기도 함
 - 지역 사무소 상근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
 - 경제적 약자 등은 전술한 민사 법률구조를 이용
- (범죄 피해자 지원) 범죄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 절차에 적절히 관여하고, 그들의 손해와 고통을 경감·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지원을 실시
 - 구체적으로 가정 내 폭력(DV), 스토킹, 아동 학대 등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상담, 범죄 피해자 지원 경험이 있는 변호사 소개, 피해자

60) 본 단락은 일본사법지원센터(法-テラス) 홈페이지의 주요 사업 소개 부분을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하였음 (<https://www.houterasu.or.jp>, 접속일자: 2019.5.2.)

참가인을 위한 국선 변호인 선임 및 비용 지원, 피해자 참가자 여비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

- 가정 내 폭력(DV), 스토킹, 아동 학대 등의 피해자를 위한 법률 상담 제도는 민사, 형사 상관없이 피해 방지에 필요한 상담이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
 - 처분 가능한 현금·예금 합계액이 300만엔을 초과하는 자는 법률 상담을 받고 난 후에 소정의 상담료(5,000엔+소비세)를 부담하여야 함
- 피해자 참가제이란 범죄 피해자 등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판 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등 형사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임
 - 피해자 참가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피해자 참가인을 위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사법지원센터는 피해자 참가인의 의견을 청취 한 후 피해자 참가인을 위한 국선변호인 후보를 지명하여 법원에 통지하고, 피해자 참가인을 위한 국선 변호인에 대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⁶¹⁾
- 피해자 참가자 여비지급제도는 피해자 참가제도를 이용하고 형사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그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하는 제도로, 사법지원센터는 여비 산정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함

□ (국선 변호 업무) 상근변호사를 포함한 계약변호사를 확보하여, 충실한 변호 서비스를 제공

- 국가의 위탁에 따라, 법원 혹은 재판장 혹은 법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선 변호인 사무를 취급하도록 계약된 계약변호사 중에서 국선 변호인 후보를 지명하고 법원에 통지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
- 2007년 11월 1일부터는 「소년법」 개정⁶²⁾에 따라, 소년 사건에 대해 법원의 직권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국선보조인제도(國選付添制度)도 사법지원센터의 관할 업무가 되었음
- 사법지원센터는 국선 변호인, 국선 보조인에 대한 보수 및 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함

61) 단, 피해자 참가인의 자력(현금·예금 등의 자산 합계액)에서 범죄 행위를 원인으로 6개월 이내에 지출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금액(치료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 200만엔 미만일 경우 지급함

- 단, 국선 변호인 및 국선 보조인 제도는 각각 형사 사건과 소년 사건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민사 사건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수탁 업무) 일본 변호사연합회, 중국잔류고아원호기금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 수행

- (일본 변호사연합회 위탁 업무) 민사 법률 구조 제도와 국선 변호 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를 대상으로 인권 구제의 관점에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업무

- 단, 지원을 받을 시에는 이용 당사자뿐 아니라 계약변호사의 신청을 필요로 함

- (중국잔류고아원호기금 위탁 업무) 중국 잔류 일본인 중 신원이 판명된 자에게 호적 수속 등에 있어 변호사에 의한 법률 원조 서비스를 제공

나. 미국의 사법형그룹홈: 오하이오 주 중간처우의 집

□ 미국의 경우,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소년사범들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을 그룹홈(group homes)으로 지칭하고 있음

- 중간처우의 집이란 일반 가정집 형태의 주거지에서 6~10명 정도의 범죄자를 소규모로 관리·감독하는 형태의 지역 사회 교정을 의미함⁶²⁾

- 미국의 그룹홈은 소년사범들을 위한 거주시설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주마다 다른 형태와 다른 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대개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음

- 법원의 명령을 받고 온 비행청소년과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회부된 아동·청소년 7~10명이 일반 가정집 형태의 주거지에서 위탁부모나 운영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룹홈의 형태임⁶³⁾

- 64%의 시설이 10명 이하를 수용하며, 전체 그룹홈의 23% 정도는 적정 인원으로 운영되며 4%의 그룹홈은 적정 인원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⁶⁴⁾

62) 박선영(2014), 「중간처우시설의 민영화 방안」, 정진수 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방안 연구(II) -교정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144.

63) 이승현·박선영(2017), 『소년법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6호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131.

64) 상계서(2017), p. 131.

- 성인 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며, 일부 그룹홈은 위탁부모 또는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기도 함
 - 감정적·행동적 어려움이 있는 소년사범들을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은 직원을 고용하는 치료적 그룹홈도 존재함
- 오하이오 주의 경우, 중간위험 소년사범들에게 안전하면서 집중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의 재범률 감소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기반 치료센터(Community Based Treatment Center; CBTC)’들을 개발하였음⁶⁵⁾
- 오하이오 청소년 복지부(ODYS)의 2005년 연구에 따르면, 폐쇄형 구금시설에 보내진 중간위험 소년사범들에 비해 지역사회에 배치된 소년사범들의 재범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지역사회 기반 치료센터 개발의 동인이 되었음
 - 지역사회 기반 치료센터는 이러한 중간위험 소년사범들이 사회 내 거주할 수 있는 대안적 시설로서, 지역사회 및 가족과의 재결합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집중적인 교화·개선 지도 서비스를 제공
 - 2009년 민간업체인 STARR Commonwealth와 계약을 맺고 오하이오 콜럼버스(Columbus, Ohio)에서 12명 정원의 지역사회 기반 치료센터를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1년 24명 정원의 지역사회 기반 치료센터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Cleveland, Ohio)에도 설치됨
 - 치료프로그램은 인지적 재구성 및 인지행동치료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총치료 시간은 대략 300시간 정도이며, 프로그램 기간은 평균적으로 거주형 치료 120일과 사후관리 120일 정도임
 - 소년사범들은 오하이오 학습기준(Ohio Academic Content Standards)에 근거를 둔 커리큘럼과 함께 높은 자격조건을 갖춘 선생님들을 채용한 실제 교육기관 또는 교육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요구됨
 - 주당 27.5시간 참여
 - STARR의 경우 교육 코디네이터가 소년사범들의 학습 성취도를 감독할 뿐 아니라, 이들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학점, GED를 획득하는 것과 같은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줌

65) E. Latessa(2014), 「미국의 민영화된 중간처우의 집」, 정진수 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방안 연구(II) -교정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 196~198을 참고하여 작성

〈표 IV-8〉 오하이오 주 지역사회기반 치료센터(CBTC)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예시

변화를 위해 생각하기(Thinking for a Change)¹⁾: 인지적 재구성, 사회기술, 문제해결 교육

자아발견과 변화를 위한 진로(Pathways to Self-Discovery and Change): 약물남용방지

공격성 대체 훈련(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 분노 조절 기술, 사회 기술, 도덕성 발달 교육

예비교육기간(Orientation sessions): 조기치료 제공

상급의 실습 그룹(Advanced Practice group)

주: 1) 변화를 위해 생각하기는 국가교정기관(The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에 의해 개발된 인지적 행동 교육과정으로 미국 전역에 걸쳐 교정 목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출처: E. Latessa(2014), 『미국의 민영화된 중간처우의 집』, 정진수 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방안 연구(II) -교정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198을 표로 재구성

□ 오하이오 주에서 그룹홈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하이오 직업과 가족부(ODJFS)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오하이오 청소년 복지부(ODYS)에서 소년사범에 대한 운영 자금을 지원⁶⁶⁾

□ 오하이오 라이트하우스 청소년 센터(Lighthouse Youth Center)

○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 위치한 ‘라이트하우스 소년 및 가정서비스(Lighthouse Youth & Family Services)’는 비행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1969년에 설립되었으며, 1970년 처음으로 오하이오 주에서 소녀들을 위한 그룹홈을 열었음⁶⁷⁾

- 현재 위탁가정, 그룹홈, 쉼터, 위기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하이오 주 내 3개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음

- 오하이오 라이트하우스 청소년센터(Lighthouse Youth Center)는 이들이 운영하는 3개의 그룹홈 중 하나임

○ 라이트하우스 청소년 센터는 소년 법정에서 명령을 받은 15~18세의 소년들을 수용하고 있음⁶⁸⁾

- 해당 센터는 1986년 오하이오 법무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3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설 외부에 보안시설이 없지만 매우 구조화된 프로그램과 전문성 있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음

66) 이승현·박선영(2017), 『소년법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6호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 132~133.

67) 상계서(2017), pp. 132~133.

68) 상계서(2017), pp. 132~133.

- 학과교육,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정신건강, 성범죄 예방,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원예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됨⁶⁹⁾
 - 2013년에는 시설 내에 대안학교인 Paint Creek Academy를 설립하여 학교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다. 캐나다의 라키비움: 국립도서관기록관(Library and Archives; LAC)

- (개념) 라키비움은 2008년 메간 윈젯이 제시한 개념으로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 기능을 결합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통합형 정보 제공기관을 의미함⁷⁰⁾
 -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서비스해오던 인쇄 매체 중심의 자료 이외에 새로운 매체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복합 공간의 기능을 수행⁷¹⁾
- (의의) 캐나다 국립도서관기록관(LAC)은 캐나다의 문서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이를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연방정부기관임⁷²⁾
 - 2004년, 캐나다 국립기록관(National Archives of Canada)과 캐나다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anada)을 통합하기 위한 「도서관기록관법(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을 통해 창설되었음
- (조직) 본부, 연방기록센터, 개티뉴(Gatineau) 보존 서고로 구성
 - 본부에는 정부 기록 관리국, 민간 기록 관리국, 보존국, 열람국, 행정지원국, 정책 관리팀, 미술관 조직이 존재함
- (활동) 캐나다 국립도서관기록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 기록과 함께 민간 기록도 수집하며, 문서 기록뿐 아니라 시청각 기록과 그림도 포함하여 수집함⁷³⁾
 - 매체에 관계없이 캐나다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수집 및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음

69) 상계서(2017), p. 136.

70) 국립중앙도서관(2015), 『도서관에서의 라키비움 실현을 위한 제도 연구』, p. 31.

71) 상계서(2015), p. 33.

72) 상계서(2015), p. 67.

73) 상계서(2015), p. 113.

- 미술품은 예술성을 기준으로 미술관과 분담하여 수집하나, 미술품도 정보를 담고 있는 ‘도큐먼트’로 규정하여 도서관 기록관 관리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 제공되는 주요 정보로는 1640~1926년의 캐나다 인구 조사 기록(센서스), 군사 유산, 1965년 이후 캐나다 대학의 논문(검색기능 제공), 족보 및 가족력(Genealogy and Family History), 1865~1935년까지의 이민 기록 등이 있음
 - 또한 지식문화유산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전시회·공연·출판물 관련 행사 등을 수행함
 - 소장 기록물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뿐 아니라, SNS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
 - 일주일에 수차례 SNS를 통해 기록물을 소개하거나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⁷⁴⁾
- (자료 규모) 희귀도서를 비롯한 약 2,000만권의 도서와 정부와 민간 기록물 241km, 약 300만점의 건축 관련 기록물, 캐나다 학위 논문과 정기간행물 등 450만 메가바이트의 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⁷⁵⁾
- 더하여 약 3,000만건의 사진 이미지, 9만편의 영상기록, 55만시간의 오디오 비디오 기록과 약 42만점의 예술 작품 등을 소장⁷⁶⁾
- (주요 실적) 2017~2018 회계연도 기준, 캐나다 국립도서관기록관은 82,221,029회의 웹사이트 조회 수를 기록⁷⁷⁾
- (자료 확보) 10,201,950개의 디지털화된 이미지와 101,889개의 출판물(법정 보증금으로 수령한 것 기준)을 확보
 - (외부 교류) 33개의 박물관과 갤러리에 362개의 물품을 대여하였으며, 106회의 LAC 보존 센터 견학이 이루어짐
- (예산 지출) 2017-2018 회계연도 기준, 약 131백만캐나다달러⁷⁸⁾ 규모 지출 예측⁷⁹⁾
- 지출 비중별로 살펴보면, 정보 접근(Access)에 가장 큰 비중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29%)

74) 신필립(2016) 「캐나다·미국의 기록관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기록인』 vol.37, p. 33.

75) 상계서(2016), p. 33.

76) 상계서(2016), p. 33.

77) Library and Archives(2018), “Annual Report 2017~2018”, p. 40.

78) 2019.6.28.기준 1캐나다달러는 882.80원으로 원화로 환산 시 약 1,156억원 규모임

79) Ibid.(2018), p. 40.

- 다음으로 특수 목적의 저장시설 관리(22%), 내부 서비스(Internal Services) 제공(19%), 자료 수집 및 가공(10%), 자료 보존(8%) 순으로 지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라. 미국의 전자소송제도

- 미국은 2001년부터 연방법원에 전자소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대부분의 연방법원이 당사자에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소송을 강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⁸⁰⁾
 - 전자문서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전자파일링(electronic filing)이라고 하며,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종이 형태로 정리하는 것에 대비되는 의미로 쓰임
 - 좁은 의미로는 법원에 전자문서로 소송제류를 제출하는 것을 뜻함
 - 미국 법원에서 전자파일링은 민사·형사 사건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연방법원과 주법원 수준에서 각각 별도로 도입되어 있으며 실시 형태도 다양함⁸¹⁾
- 연방법원 전자파일링제도는 ‘전자소송기록 일반열람 시스템(PACER)’과 ‘전자사건관리시스템(CM/ECF)’의 이원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⁸²⁾
 - 1988년 9월 미국 사법 회의(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자소송기록 일반열람 시스템(PACER)을 승인하였음
 - PACER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전자사건관리시스템(CM/ECF)와 함께 연방법원과 변호사, 판사 및 직원들의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제가 되었음
 - 2000년대 초반 PACER과 CM/ECF 사용은 급격히 증가, 2002년 94개 지방법원 중 11개 법원, 90개 연방파산법원 중 40개 법원이 PACER과 CM/ECF을 도입하였으며, 2012년 11월 기준 지방법원과 연방파산법원은 모두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⁸³⁾
 - 현재 5억개의 문서가 CM/ECF에 있으며, 전국 70만명 이상의 변호사가 전자문서를 제출하고 있는 등 널리 활용되고 있음⁸⁴⁾

8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2012), 『현행 전자소송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p. 9.

81) 상계서(2012), p. 10.

82) 미국 법원 홈페이지, <https://www.uscourts.gov/news/2013/12/09/25-years-later-pacer-electronic-filing-continue-change-courts> 검색일자: 2019. 6. 27.

83) 상계서(2012), p. 13.

- 연방법원 전자파일링시스템은 PACER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발전하였음⁸⁵⁾
 - 초기에는 열람시스템을 이용하여 변호사들이 사건진행경과표(docket)을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음
 - 변호사들은 온라인상으로 제출 서류의 접수사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목록, 변론 기일 등 법원의 일정을 확인
 - 법원 사무관이 접수문서를 스캔하여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이를 사건진행경과표에 링크하여, 변호사들이 실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후, 당사자가 직접 CM/ECF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짐
- 최근에는 차세대 CM/ECF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⁸⁶⁾
 - 2014년 시범 법원 그룹을 공개하고, 그 중 두 개 법원(제2 연방 순회 항소법원,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2014년 10월 운영을 시작
 - 몇 년 내 완전한 전환을 예상하고 있음
 - 차세대 CM/ECF는 전자방식으로 파일을 작성할 수 있는 모든 법원들에 대해 사용자가 단일 계정에서 PACER 및 전자파일링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 (운영) 전자소송기록 일반열람 시스템은 연방법원이 사용자등록을 통합관리하고, 전자사건관리시스템은 각 연방지방법원별로 별도로 자율적인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양자는 서로 연동하여 운영되고 있음⁸⁷⁾
 - 전자사건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소송당사자에게 제출사실이 전자우편으로 통지되고, 소송당사자는 메일에 링크된 문서등재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서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음⁸⁸⁾
 - 전자소송기록 일반열람 시스템은 소송당사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인도 누구나 사용자등록을 한 후에는 열람이 가능함
 - 진행 중인 사건 관련된 통지는 즉시 신고자와 등록된 모든 참가자에게 전자

84) 미국 법원 홈페이지, <https://www.uscourts.gov/courtrecords/electronic-filing-cmecf/faqs-case-management-electronic-case-files-cmecf>, 검색일자: 2019. 6. 27.

85) 상계서(2012), p. 13.

86) 미국 법원 홈페이지, <https://www.uscourts.gov/courtrecords/electronic-filing-cmecf>, 검색일자: 2019. 6. 27.

87) 상계서(2012), p. 11.

88) 상계서(2012), p. 11.

메일로 발송되며, 메일로 발송된 통지에는 제출된 문서와 일람표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달려있어 쉽게 열람이 가능

- 법원의 재량에 따라 등록된 변호사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사건에 관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음⁸⁹⁾
 - 변호사가 인터넷을 통해 제출한 문서는 사건진행경과표 시트(docket sheets)에 즉시 업데이트됨

89) 미국 법원 홈페이지, <https://www.uscourts.gov/courtrecords/electronic-filing-cmecf/faqs-case-management-electronic-case-files-cmecf>, 검색일자: 2019. 6. 27.

V. 종합

- 사법서비스 사업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수행한 이후, 사업체계 및 기금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개선되는 성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향후 기금사업의 안정적 수행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발굴의 필요성이 내·외부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기금운영 및 사업활성화 방안을 모색
- 본 보고서에서 논의한 내용을 운용체계의 관점, 사업 활성화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기금운용개선

가. 기금사업 과목구조 개편방향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할 경우, 프로그램 예산 분류 방식에 따라 5개의 세부 사업으로 분류
 -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 소송구조 지원, 조정제도 지원, 법률구조단체 사업 지원, 사법서비스 향상 등 5개 세부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이러한 세부사업 분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공탁법」 제31조의 각 항(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분류라 볼 수 있음
 -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은 제1항, 소송구조 지원은 제2항, 조정제도 지원은 제3항,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은 제4항, 사법서비스 향상은 제6항에 각각 대응됨

〈표 V-1〉 「공탁법」 제31조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 검색일자: 2019. 4. 2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185&efYd=20160101#0000>

○ 그 중 제6항에 해당하는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은 사법제도 개선이나 사법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공익사업들로 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음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소년보호지원사업, 민원서비스개선사업, 사법서비스향상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표 V-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년보호지원사업
2. 민원서비스개선사업
3. 사법서비스향상사업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검색일자: 2019. 4. 2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500&efYd=20151229#0000>

□ 한편, 기금운용계획상 각 세부사업별 지출 계획 금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이 전체 사업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2%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⁹⁰⁾

90) 2019년도 계획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57.2%는 전체 지출에서 기금운영비 및 여유자금운용 예산을 제외한 금액 대비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것임

- 다른 세부 사업들의 비중이 5.8%(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 사업)~18.9%(조정제도 지원 사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이 지출 계획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라 볼 수 있음
- 또한 전년 대비 증가율 역시 12.0%로 가장 높아 향후 전체 기금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

〈표 V-3〉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 지출 계획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세세사업 (기능별 분류)	2018년도	2019년도		증감	
		금액(A) ²⁾	금액(B)	비중 ³⁾	금액(B-A)	증가율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	공탁시스템 운용 및 유지	2,751	2,847	5.4	96	3.5
	공탁시스템 UHD 사업	184	184	0.4	-	-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 사업 소계		2,935	3,031	5.8	96	3.3
소송구조 지원	일반 소송구조 지원	4,986	5,249	10.0	263	5.3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원	1,000	1,000	1.9	-	-
	소송구조개선 연구활동	36	-	-	-36	-100.0
소송구조 지원 사업 소계		6,022	6,249	11.9	227	3.8
조정제도 지원	조정제도 운영	9,268	9,915	18.9	647	7.0
	서울국제중재센터 육성 지원	45	-	-	-45	-100.0
조정제도 지원 사업 소계		9,313	9,915	18.9	602	6.5
법률구조단체 사업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 지원	2,902	2,902	5.5	-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업 지원	180	180	0.3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업 지원	180	180	0.3	-	-
법률구조단체 사업 지원 사업 소계		3,262	3,262	6.2	-	-
사법서비스 향상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7,944	8,342	15.9	398	5.0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	12,377	8,022	15.3	-4,355	-35.2
	민원서비스 개선	5,602	12,782	24.4	7,180	128.2
	사법교육 및 대국민소통 지원	848	848	1.6	0	0.0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소계		26,771	29,994	57.2	3,223	12.0
총계¹⁾		48,303	52,451	100.0	4,148	8.6

주: 1) 기금운영비 및 여유자금운용을 뺀 순수 기금 사업비 총액임

2) 금액은 계획 금액

3) 기금 사업비 총액 대비 해당 사업 지출 계획 금액을 의미

출처: 대법원 내부자료, 「기금운용계획」, 2019. 참고하여 표로 작성

〈표 V-4〉 ‘사법서비스 향상’ 세부 사업 내 사업 리스트

세세사업(기능별 분류)	사업 리스트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8,3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비송 절차구조 비용지원 및 소년보호재판 지원(3,3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 활성화(45) - 가사비송사건 절차구조 활성화(27) - 소년보호시설 등에 대한 비용지원(2,750): 위탁보호위원 지원(1호처분), 위탁보호위원교육비용, 수감명령기관 지원(2호처분), 위탁기관 지원(6, 7호처분) - 소년보호사건 부가처분 등에 대한 비용 지원(81): 대안교육 및 상담명령,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 전문가진단·상담 및 화해권고위원 수당 지원(137): 전문가진단, 전문가상담, 화해권고위원 비용 지원 - 소년보호재판 활성화(336): 청소년 참여법정, 청소년 교정복지 프로그램, 소년 캠프, 소년보호재판 및 통고제도 안내 비용 지원 ○ 이혼 전 상담위원 운영(1,3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위원수당(1,309) ○ 가사재판 안내를 위한 책자 발간 등 지원(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자발간(274): 양육수첩, 외국인(다문화가정)을 위한 안내 책자, 부모 책자 - 가사재판실무연구회 운영 지원(86) ○ 성년후견제도 지원(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안내 비용(201) - 후견인·후견감독인 관리, 감독 비용 등(419): 후견인·후견감독인 교육 및 간담회, 후견감독사건 출장조사 지원, 후견감독위원 수당, 후견인 보수 지원 ○ 치유적 사법제도(힐링코트) 지원(1,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당사자 및 미성년자녀 지원 등(690) - 가사사건 관련 전용상담실 등 운영 지원(393) - 힐링코트 교육, 워크숍 등 지원(116) ○ 아동보호절차 등 지원(1,3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절차 비용 지원(671) - 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 비용 지원(499) - 특례법 시행에 따른 간담회 및 매뉴얼 등 제작 등 비용(179) ○ 가사·소년 법관 및 조사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지원(129)

〈표 V-4〉의 계속

세제사업(기능별 분류)	사업 리스트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 (8,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1,8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창구 설치 및 운영(717) - 민원상담, 통역 등 사법서비스 제공(1,137) ○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797) ○ 민원업무지원(350) ○ 판결서 공개(3,829) ○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1,005) ○ 지역사회 사법참여 및 피드백 활동 지원(241)
민원서비스 개선 (12,7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빠른 통합민원상담창구(10,0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안내업무(2,456) - 민원상담위원(962) - 사건기록 전자화(6,466) - 스마트 민원서식 시스템 운영(213) ○ 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 운영(2,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 위탁운영사업(2,026) - 서울중앙지법 경매업무전담 전화민원상담원(40) - 법원대표전화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41) - 노후시스템 교체(112) ○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4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문 발송 우편료(406) - 안내문 발송을 위한 지원인력 인건비(21) - 신문광고(14) - 공탁관워크숍(25)
사법교육 및 대국민소통 지원 (8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원(3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사법교육 지원(165): 초·중·고 학생 법교육 지원, 교사 사법교육 직무연수, 다문화·장애인 가정 초청 법교육 프로그램, 어울림 법인문학 강의, 찾아가는 사법연수원 아카데미, 법률문화학교 - 대국민 사법체험 지원(123): 모의재판 프로그램, 직업 체험 프로그램, 중학교자율학기제 지원, 청년직장체험 - 법교육 책자 발간(66) ○ 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 지원(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법위원회 및 시민참여단(98) - 오픈코트를 통한 사법이해 증진(108) - 가족관계 회복 지원(27) - 법문화체험 컨퍼런스(243) - 영블로거 위원회 지원(18)

주: 괄호 안 금액은 2019년도 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출처: 대법원 내부자료, 「기금운용계획」, 2019의 내용을 참고하여 표로 재구성

-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은 「공탁법」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여타 사업들을 한데 묶어놓은 성격이 강하며, 사업의 지출 규모도 전체 지출 규모의 40%에 해당할 정도로 다른 세부사업들에 비해 매우 크므로 보다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19년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는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에서의 ‘사법서비스 향상’의 기준이 다소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음
 - (대안 1) 대법원 규칙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년보호지원사업, 민원서비스사업, 사법서비스향상사업을 세부사업 단위로 올리고, 나머지를 기타 공익사업으로 분류하는 방법
 - (대안 2) 현행 분류체계에서 ‘세부사업: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을 보다 세분화
 - 세세사업인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성년후견제도 지원, 가사비송사건 관련 지원, 소년보호 지원을 각각의 세세사업으로 분류

나. 중복사업에 대한 개선방향

- (사업 분류) 국선변호료 지원사업은 프로그램 단위로 분류할 경우 재판활동종합지원(1100), 단위사업 단위로 분류할 경우 공정한재판운영(1145)으로 분류되는 세부사업 중 하나임(480)
- (사업의 성격) 국선변호료 지원사업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행되고 있는 대법원 일반회계상 단년도 계속사업임
 - (목적) 구속영장심문을 받은 피의자, 구속피의자·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01조의2, 제214조의 2, 제226조의8, 제282조, 제438조
- (예산 편성)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으로는 구체적으로 국선변호인에게 지급되는 보수, 전담국선변호사 사무실 지원, 올해의 국선변호인 포상금 및 간담회비, 국선변호사 교육 및 간담회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됨
 - 2019년도 예산 기준, 사업예산인 60,024백만원 중 거의 대부분인 55,924백만원이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에 사용되는 것이 특징적임

- (운영) 국선변호료 지원은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공탁법」 제3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나, 600억원이 넘는 사업으로서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 이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반회계로 넘겨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금존치평가에서는 「공탁법」 제31조 제2항을 근거로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한 상황임
- (고려사항 및 대안)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중복수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중복사업이라기보다 “사법서비스의 안전망 강화”를 통한 사법적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에서 평가도 가능함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국선변호료가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거나,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고려사항 및 대안) 1차적으로는 사업 운영상의 현실을 반영하여, 「공탁법」 제31조 제2항에서 해당 부분(“국선변호인 제도 및”)을 삭제하는 개정을 시도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공탁법」 제정취지 및 사법서비스진흥사업의 주요목적은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고려사항 및 대안)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의 활성화 및 규모 증대를 통해 국선변호료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혜대상(인적 특성, 사건 특성을 고려)을 기준으로 지원범위를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중복사업의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2. 사업 활성화

- 소송구조지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차상위계층까지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사업의 수혜대상이 확대될 여지가 증가한 것과 함께 소송구조 서비스의 품질 제고, 소송구조 변호사비용에 대한 지원수준 합리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고 있음
 -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개인파산 및 회생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변호사 비용 지원수준을 범위로 기준을 산정하고, 난이도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조정제도 활성화는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식 재판이 아닌 대안적 사법절차를 통해 사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활성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기반한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함
- 전문성과 조정대상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당지급의 범위와 방식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법서비스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 및 성년후견사업을 고려할 수 있음

-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 지원의 경우 교육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방식을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보호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여 회복기능의 표준화,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서 성년후견의 필요성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후견인 활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법서비스의 잠재적 수혜대상이 다원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서비스 접근 강화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난민,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적 전문성에 기반한 외국어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전자법원 및 전자소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소송자료 및 문건의 전자문서화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법원의 민원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 교육훈련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도서관의 잠재적 서비스기능을 실현하여 서비스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 개발, 교육훈련을 통해 법원 구성원들의 서비스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원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및 정보저장의 수단으로 정체되는 것보다는 교육적 기능, 역사적 기능, 문화적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의 준법문화 강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설 이후 기금사업체계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적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수혜대상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도 사업 발굴노력과 함께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

참 고 문 헌

- 공공도서관협의회, 「2018년 해외 선진도서관 연수보고서 -독일-, 2018.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에서의 라키비움 실현을 위한 제도 연구』, 2015.
- 김희삼,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7.
- 대법원, 『2019년 기금준치보고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019.
- _____, 『사법연감』, 각 년도(2010~2017).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016.
- 박선영·송주영·E. Latessa, 「중간처우시설의 민영화 방안」, 정진수 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방안 연구(Ⅱ) -교정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제2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pp. 135~396.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년도(2013~2017).
- 신필립, 「캐나다·미국의 기록관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기록인』 vol. 37, 2016.
- 유병현, 『현행 전자소송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 이승현·박선영, 『소년법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6호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한민경, 「주요국의 형사공공변호제도 비교」, 김대근·한민경, 『공공변호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pp. 43~78.
- 함영주, 「민·상사 사건의 소송대체분쟁해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조정절차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0호, 2017, pp. 1~37.
- Library and Archives, “Annual Report 2017~2018,” 2018.
- 대법원 내부자료, 「기금운용계획」, 각 년도(2016~2019).
- _____, 「소년사건의 1호·6호 처분 기관」
- _____, 「전자소송」
- _____, 「조정위원 수당 지급기준」, 각 년도(2015~2019).

_____,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초안)」

_____, 「20년 예산안 2차심의 자료」

박주민 의원실, 「소송구조신청 처리결과 현황자료」, 2017.10.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내부자료

「가사소송법」, 법률 제14961호.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대법원규칙 제2805호

「공탁법」, 법률 제15971호.

「민법」, 법률 제14965호.

「소년법」, 법률 제15757호.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6248호.

일본 「민사조정법」

일본 「민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공공도서관협의회, <http://www.kpla.kr>, 검색일자: 2019. 7. 9.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검색일자: 2019. 7. 9.

대한민국 법원, <http://www.scourt.go.kr>, 검색일자: 2019. 5. 15.

미국 법원, <https://www.uscourts.gov>, 검색일자: 2019. 6.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19. 4. 29., 2019. 6. 29.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https://www.nid.or.kr>, 검색일자: 2019. 5. 15.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검색일자: 2019. 5. 15.

일본 사법지원센터, <https://www.houterasu.or.jp>, 검색일자: 2019. 5. 2.

일본재판소, <http://www.courts.go.jp>, 검색일자: 2019. 6. 27.

캐나다 국립도서관기록관, <http://www.bac-lac.gc.ca/eng/Pages/home.aspx>, 검색일자:
2019. 5. 2.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https://www.cand.uscourts.gov>, 검색일자: 2019. 6. 18.

통계청, <http://kostat.go.kr>, 검색일자: 2019. 5. 15.

파리 조정·중재센터, <http://www.cmap.fr>, 검색일자: 2019. 6. 27.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main.do>, 검색일자: 2019. 5. 1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발전방안 연구 (제1권)

발행일 | 2019년 9월

발행처 | 법원행정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Tel : (02)3480-1247

연구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쇄처 | 일지사

Tel : (02)503-6971

〈비매품〉